

2013  
306.9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安保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統一政策－國際關係

# 韓半島平和의 制度的保障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研究執筆責任 李承憲



(略歷) 서울大學校 文理大 政治學科 卒業  
英國 및 濠洲의 大學院에서 研究, 政治學 博士  
國土統一院,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非常任研究委員  
建國大學校 政法大學 教授 (現在)  
國務總理室 政府施策 評價委員 (現在)

刊行責任 呂成九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 要 約 文 >

第2次 世界大戰後 國際的 勢力版圖의 變遷에 따라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亞의 勢力構造도 몇번이나 變化되어 왔다. 70年代에 들어 “데탕트” 趨勢에 따라 亞細亞·太平洋地域에 美·蘇·中共·日 4強間의 相互牽制的 勢力均衡體制가 支配的 役割을 하는 上位 國際體制로 登場하자 이는 韓半島에도 投影되었으며 마침내 大韓民國의 “이니셔티브”로 始作된 南北對話를 契機로 南北韓이 東北亞의 4強勢力構造안에 編入되어 육자간의 2원교차적 多극상황이라는 錯雜한 勢力關係가 展開되기 始作하였다. 이 마당에 있어서는 南北韓의 理解와 周邊 4大國의 理解를 調整하여 모든 当事者들의 理解를 하나의 平和體制 하나의 國際秩序로 系列化, 制度化할 것이 課題로 提起되었으나 그 後의 事態發展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實證해주고 있다.

70年代에 들어 本格的으로 展開된 南北韓의 平和構想과 平和戰略은 南北韓의 實態와 國際環境이라는 内外의 諸變數要因의 複合的 作用을 받아 變轉하고 相互對應하는 가운데 허허실실의 순환과정을 받아 왔다.

本 論文에서는 大韓民國의 統一政策과 北韓의 統一戰略이라는 큰 脈絡속에서 大韓民國의 韓半島 平和定着 努力과 北韓의 偽裝平和攻勢가 어떻게 樣相變化를 해왔는가를 諸變數 要因과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의 基本原則 및 준거유형과의 關聯下에 分析·評價하는 가

운데 우리나라가 主導하는 韓半島 平和의 制度的 保障課業의 問題  
點과 將來展望을 中間點檢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平和統一政策은 70年의 “8.15 宣言”(平和統一 基本構  
想)을 始發點으로 하여 72年의 7.4 共同聲明, 73年의 “6.23 宣  
言”(平和統一 外交政策 特別宣言), 74年 1月 18日의 “南北韓  
不可侵協定 提議”를 거쳐 74年 8月 15日 朴正熙大統領이 闡明  
한 “平和統一 3大原則”으로 綜合, 集大成되었는데 이는 平和主義,  
民族自決主義, 國際協調主義 및 機能主義에 立脚하고 있으며 有機的  
으로 連關되어 하나의 體系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特色이다. 그  
리고 그 後의 展開過程이 表示하다시피 眞實性和 一貫性을 가지고  
있으며 合理的이고 論理的이고 現實的이라는 點에서 國際的 公明과  
支持를 받아왔다. 특히 “先平和, 後統一”의 論理에서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킬 것을 急先務로 삼아 이를 위한 具體的 方案으로  
써 南北韓 不可侵協定 提議外에도 南北韓 UN 同時加入, 南北韓과  
周邊 4 強과의 關係改善등이 提示되었다.

한편 南北韓力量比較에 있어서의 優勢·等勢·劣勢 또는 周邊情勢  
의 有利, 混迷, 不利 如何에 따라 臨機應變的으로 暴力的 方式과  
平和攻勢的 方式을 번갈아 適用해 온 北韓은 70年代에 들어 初  
期에는 共存을 통한 吸收戰略으로 나오다가 後에 體制維持戰略으로  
後退하였다.

그들은 71年 4月 12日의 이른바 “8個項 平和統一案” 73年  
3月과 6月의 南北調節委員會 會議때의 南北韓軍縮 및 平和協定提

議 및 73年 6月 23日 金日成이 發表한 이른바 “平和統一 5大綱領”을 밑고 나왔는데 이것들이 共通的으로 意圖하는 바는 一切의 國際的 要因을 사상하여 統一問題를 純粹한 國內問題로 單純化시킴으로써 4大國을 主軸으로 하는 東北亞에서의 새로운 勢力均衡體制의 形成을 妨害하고 美軍의 南韓撤収를 促進시키는 가운데 再南侵 또는 南韓革命을 통한 共產化統一의 素地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北韓이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시킨 後로는 南北韓의 統一政策과 平和戰略이 國際外交舞臺에서 對決을 하게 되었다. 北韓은 韓國의 不可侵協定提議를 拒否한지 얼마 안되어 74年 3月 25日 美國에 대해 双務的 平和協定の 締結을 提議하였으며 이어 U N內 外에서 偽裝平和攻勢를 激化시켜 왔다. 특히 75年の 第30次 U N總會에서는 南北對話의 團結과 모든 直接當事者가 休戰協定代案 및 恒久的 平和保障을 지향하는 協商을 開始할 것을 促求하는 西方側 決議案과 U N軍司令部의 無條件解除, 駐韓外國軍의 撤収,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代替, 南北韓의 軍備縮少등을 要求하는 共產側 決議案이 다 같이 通過되는 異變을 낳았다. 이러한 事實은 U N이 韓半島問題에 관한 한 能力의 限界에 到達하였음을 드러냈으며 따라서 今後 韓半島問題는 U N을 통해서가 아니라 南北韓의 直接對話나 모든 當事者들의 協商을 통해서 解決하는수 밖에 없다는 論理를 뒷받침해 주었다.

事實 南北韓에게 공히 U N의 政略的 効用은 없어졌으며 北韓도

76年の 第31次 UN總會때 決議案을 提出하였다가 撤回하였고 77年の 第32次 總會와 78年の 第33次 總會때에는 아예 上정치 않고 있다.

한편 “키신저” 美國務長官은 75年 9月の UN總會 演說에서 南北韓 및 美·中共 4者間의 韓半島 休戰当事者會談과 이에 蘇·日을 包含한 6者間의 擴大國際會議 開催를 提議하였고 그후 韓國과의 協議를 거쳐 南北韓予備會談을 먼저 열것을 중용하는 修正提議를 하였다.

이러한 構想은 韓半島 平和는 南北韓間의 協定締結과 周邇4 大國의 國際保障이라는 二重構造를 갖추어야 한다는 構圖를 反映하는 것인데 北韓은 現在까지 이를 拒否하고 도리어 對美接觸을 통해 美國과의 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해 왔다.

이 局面까지에 우리나라 學界에서는 韓半島平和의 制度的 保障에 관한 많은 構想과 方案이 提示되어 왔는데 그 準거유형으로는 “로카르노” 體制方式, 東西獨 共存體制方式, UN 安保理事會 関与下의 東北亞 安保共同體方式등이 提起된 外에 共榮邦制, 韓半島 中立化 (緩衝地帶化), UN 韓半島平和監視委員團의 設置, 南北韓 軍縮에의 政治的 接近, 南北韓 一般關係協定の 締結등이 建議되었다.

76-77年에 周邇4 大國에서 執權層이나 權力體系가 變動되고 그들의 外交政策과 軍事戰略이 再定立됨에 따라 이들의 對韓半島政策도 달라지고 이에 南北韓은 周邇4 大國과 理解關係를 再調整할 必要가 생겼는데 韓國으로써는 “카터” 美行政府가 推進하는 駐韓美軍撤収計

劃과 關聯하여 軍事的, 外交的 補完措置에 合議함으로써 韓·美兩國 間의 戰略協調態勢를 再整備, 強化하게 되었다. 한편 “티토”大統領의 거중역할로 南北韓 및 美國間의 3者會談이라는 절충안도 나왔으나 北韓은 이것마저 拒否하고 있다. 그러자 最近에 와서는 美·蘇關係의 冷却, 美·日·中共聯合体制의 대두등으로 世界情勢가 “第2의 冷戰期”로 逆行하느냐 또는 “第2의 데탕트 모색기”로 安착하느냐의 分기점에서 轉換期的 流動性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韓半島 周辺情勢도 微妙·錯雜한 움직임 가운데 混迷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75年の 인지사태이후 韓·美兩國은 化전양락을 취하면서도 戰爭 体制를 우선시하는 “安保戰略”에 置重하지 않을 수 없었거니와 韓·美 두나라가 지는 韓半島平和戰略 즉 韓半島平和의 制度的 保障에 관한 構想은 國際的 与件的 不成熟과 北韓의 武力革命戰略 아집때문에 아직 實現段階에 들어가지 못하고 原点에서 맴돌고 있는 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끝까지 平和統一의 前提条件으로써 韓半島平和의 制度的 保障을 願한다면 앞으로 周辺4 大國에 대해 “均衡잡힌 平和外交”를 더욱 積極的으로 展開함으로써 韓半島平和 및 統一에 有利한 國際環境을 造成하고 北韓을 南北對話 및 当事者會談의 장으로 유도하는데 注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優勢해진 国力을 바탕으로해서 우리나라가 항상 “이니셔티브”를 취하며 平和와 統一을 선후 병진적으로 추구한다는 前提下에 우리의 韓半島平和의 制度的 保障에 관한 具體的 計

劃을 再定立, 積極化시킬 것이 바람직하다.

事件으로 다음과 같은 試案을 提示해본다.

1. 对決的 共存段階에서 戰爭抑制, 南北對話 및 当事者會談 開催에 有利한 環境與件의 造成을 戰略目標로 하여 現在까지 취해온 対応策을 一層 強化한다.
2. 中道的 共存段階에서 平和의 定着과 南北對話의 實質的 進行을 戰略目標로 하여 南北韓 不可侵協定과 休戰協定代替措置에 관한 南北韓 및 美·中共間의 4者協定(내지 의정서)을 締結하고 南北對話의 構造와 機能을 強化하고 南北韓 一般關係協定을 締結한 後 可能하면 U N에 同時加入한다.
3. 協調的 共存段階에서 韓半島平和 및 統一에 關한 國際的 保障의 確保와 南北韓交流 및 協調의 本格化를 戰略目標로 하여 6者間 擴大國際會議에서 韓半島平和 및 統一에 關한 國際的 合議를 보고 南北韓間에 서로 代表部를 設置하며 軍縮을 實施하며 統一을 지향한 多角的 交流, 協調를 增進한다. 끝으로
4. 統一完成 및 統一後 段階에서는 政治的 統一의 完成과 統一韓 國의 國際的 座標 確定을 戰略目標로 하여 自由選舉를 통해 統一韓國政府를 樹立하고 U N加入을 單一化하고 善隣平和政策을 선명하는등 한다. 끝.

## 目 次

I. 70年代 韓半島 内外關係의 推移(序說).....	3
II. 初期의 自主的 平和統一努力과 政策構想.....	6
1. 朴大統領의 「8.15宣言」에서 南北對話中斷까지의 事態發展.....	6
2. 韓國問題에 관한 유엔에서의 外交的妥協.....	10
3. 大韓民國統一政策의 特徵과 南北韓不可侵協定提議의 基本論理.....	13
4. 北韓統一戰略의 本質과 南北韓軍縮 및 平和協定提議의 底意.....	16
III. 韓半島平和問題를 둘러싼 國際外交.....	20
1.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提議.....	20
2. 國際的 外交對決의 復活.....	23
3. 韓半島休戰當事者會談構想의 發表.....	25
4. 第30次유엔總會에서의 對決과 그後의 動向.....	26
5. 第31次유엔總會에서의 票對決回避.....	29
IV. 韓半島平和의 制度的 保障方法에 관한 諸論議.....	31
1. 基本原則과 接近方法.....	31
2. 準換類型과 關聯된 諸發想.....	35
3. 休戰協定 代替問題.....	42
4. 南北韓軍縮問題.....	46

5. 南北韓一般關係 設定問題	50
V. 南北韓 및 周辺四大國間の 政策調整	53
1. 韓半島 環境狀況의 變化	53
2. 韓美間의 새로운 戰略協調態勢	54
3. 美·北韓接觸과 三者會談案	57
4. 새로운 變數要因의 抬頭	61
VI. 總括과 將來展望(結語)	67
1. 全歷程의 特徵的 樣相	67
2. 將來展望과 우리나라의 新平和構想	72

## I. 70年代 韓半島 內外關係 推移(序說)

第二次世界大戰後 國際的 勢力版圖의 變遷에 따라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亞의 勢力構造도 몇번이나 變化되어 왔다. 最初에는 東西兩陣營間의 兩極構造를 反映하여 美·蘇를 背景으로 한 兩極的 對抗體制가 成立되는 가운데 冷熱戰을 體驗하였으며 60年代 中葉以後에는 國際政治多元化 傾向에 따라 北韓·蘇聯·中共間의 微妙한 北方三角同盟과 大韓民國·美國·日本間의 緩慢한 南方三角協力體制가 對峙해 왔다. 70年代에 들어와서 「닉슨·독트린」이 本格的으로 展開된 後로는 緊張緩和·平和共存의 大勢가운데 世界秩序再編成의 機運이 醸成되어 亞細亞太平洋地域에서도 美·蘇·中共·日本 四大國間에 相互 牽制的 勢力均衡體制가 摸索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른바 「四強體制」가 亞細亞太平洋地域에서 支配的 役割을 하는 上位 國際體制로서 抬頭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自然히 東北亞의 戰略的 要衝인 韓半島에도 投影되어 美·蘇·中共·日本의 四大國이 利害當事國으로 浮刻되는 가운데 韓半島를 둘러싼 그들사이의 關係가 交錯하기 始作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韓半島에서 緊張을 緩和시키고 武力衝突의 再發을 防止할 수 있다면 當分間 分斷現狀을 維持한채 南北韓으로 하여금 서로 競爭的 共存을 繼續시켜 나가는데 大体로 利害의 一致를 보고있는 것으로 理解되었다. 여기에 있어 韓半島周邊情勢의 變化에 能動·自主的으로 對處하여 南北韓 平和統一의 基盤을 造成하려는

大韓民國의 「이니셔티브」로 72年7月4日 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고 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會談의 二個의 通路를 通하여 南北對話가 始作됨으로써 南北關係가 劃期的 新局面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를 契機로 南北韓은 南北亞의 四強勢力構造안에 編入되어 六者間에 二元交叉的 多極狀況 (cross-cutting bimultipolarity), 이라는 錯雜한 勢力關係가 展開되기 始作하였다. (1)

이마당에 있어서는 南北韓의 利害와 周邊四大國의 利害사이의 葛藤을 調整하여 모든 當事者間의 利害를 하나의 平和體制, 하나의 國際秩序로 系列化·制度化할 것이 課題로 提起되었으나 그後의 事態進展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實証해 주고 있다. 元來가 韓半島의 平和(安保)·統一問題는 南北韓間의 內部問題인 同時에 周邊強大國間의 利害調整과 「유엔」이라는 世界機構에서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는 二重·三重의 構造的 關係에 있는데다가 平和(安保)라는 外觀上 現狀維持的인 要請과 統一이라는 一見 現狀變更(打破)的인 要請을 兩立·調和시킬 것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그 困難性이 加增된다. 그리하여 南北韓의 安保·統一政策, 周邊四大國의 對韓半島政策 및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가 錯雜하게 相互作用해 왔으며 韓半島情勢가 全體的으로 緊張緩和의 方向으로 나가느냐 또는 緊張高潮의 方向으로 나가느냐, 現狀維持를 指向하느냐 또는 現狀變更(打破)을 指向하느냐, 兩極的 對抗體制에 머무느냐, 또는 多元的 共存 乃至 協調體制로 轉換되느냐 하는 것이 國內外的 注目거리가 되어 왔다. (2)

南北韓・周邊四大國 및 유엔이라는 세 가지次元을 關聯시켜 볼 때 70年代를 通해 韓半島 平和・統一問題는 다음 세 局面의 變轉을 겪어 왔다.

(1) 南北對話進展 및 國際的 外交妥協의 局面(1970.8~1973.11)

(2) 南北對話 中斷後의 國際的 外交對決의 局面(1973.11~1976.10)

(3) 南北韓 및 周邊四大國間의 利害調整局面(1976.10~1978 現在)

以下 本論文에서는 大韓民國의 統一政策과 北韓의 統一戰略이라는 二 脈絡속에서 大韓民國의 韓半島平和定着努力과 北韓의 偽裝平和攻勢가 위의 세 局面에 걸쳐 어떻게 樣相變化를 하며 相互作用해 왔는가를 여러 變數要因 및 準拠類型과의 關聯下에 分析評價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主導하는 韓半島平和의 制度的 保障課業의 問題點과 將來展望을 中間點檢해 보는데 重點을 두었다.

## II. 初期의自主的 平和統一努力과 政策構想

### 1. 朴大統領의 「8.15 宣言」에서 南北對話中斷까지의 事態發展

「대당뜨」潮流에 대한 우리나라의 첫 공식反應은 1970年 8月 15日 朴正熙大統領이 發表한 「平和統一基本構想」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南北關係를 對決로 부터 平和的 競爭으로 轉換시키려 하였다는 點에서 劃期的 意義를 가진 것이었다. 事實 이 「8.15 宣言」은 名分論에 立脚한 從來의 消極的이고 非現實的인 統一政策을 積極的이고 融通性있는 것으로 만들어 民族이라는 統合論理위에 脫理念的이고 平和的인 統一政策으로 轉換시킬 契機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한편 共產主義理念에 따라 南韓을 吸收·統合할 것을 統一政策의 基調로 삼아 或은 武力統一方式을 試圖하고 或은 統一戰線戰略을 追求하고 或은 有關係國間會議의 召集을 提議하는등 平和攻勢를 取해 오다가 60年代初葉부터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아래 四大軍事路線을 露骨化해 온바 있는 北韓은 이 「8.15 宣言」後에도 그 統一戰略에 當場에는 變調機微를 나타내지 않았다. 70年 11月 2日의 第5次勞動黨大會에서 金日成은 如前히 「南朝鮮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 鬭爭」을 支援할 것을 強調하였다. 그리고 71年 4月 12日에 허담 外相이 最高人民會議에서 發表한 「8個項平和統一案」은 美軍撤収, 韓美相互防衛條約 및 韓日基本條約의 廢棄外에도 南北聯邦制의 實施

南北政治會談의 開催등을 提議하여 南北韓關係의 安定化를 試圖하는 듯한 印象을 주었으나 本質的으로는 「南朝鮮革命戰略」(統一戰線戰略)에 基礎를 둔 것이었다.

한편 美國은 이 時期에 韓國防衛의 韓國化措置를 取하기 始作하였다. 그리고 71年 6月 美下院外交委員會 聽問會에서의 前駐韓美國大使 「포오터」氏의 發言에 비추어 美國은 韓半島全體를 「非軍事化」하여 緊張을 緩和시키고 美·蘇·中共·日本의 合意下에 「共同緩衝地帶」를 設置하려는 構想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또한 周恩來中共首相은 71年 8月 10日 「제임스·레스턴」 「뉴욕·타임스」記者와의 會見時에 中共이 韓國戰爭終結措置로서 平和條約을 締結하여 紛爭의 再發防止와 南北韓의 共存을 制度的으로 確保하고 나아가 周邊四大國間에도 共存狀況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음을 비유했다. 그리고 美國으로서도 現在의 休戰措置를 公式的인 戰爭終結措置로 發展시켜 平和條約을 맺고 나아가서 關係國間의 不可侵條約이나 平和宣言으로 東北亞平和體制를 樹立하려 構想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想定되었다. 또한 蘇聯도 南北分斷의 公式化를 通해 北韓의 地位를 合法化시키는데 큰 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具體的으로는 韓國에서 戰爭終結措置를 取할때 南北韓間에 相互地位認定協定같은 것을 아울러 締結시키려 하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71年의 第26次 유엔總會에서는 和解를 指向하는 國際情勢의 흐름에 비추어 그리고 板門店에서 進行中인 南北赤十字豫備會談을 害치지 않으려는 配慮에서 韓國問題不上程案이 可決되었다.

그리고 美中共頂上會談과 美蘇頂上會談에 이어 72年7月4日 發表된 歷史的인 「南北共同聲明」은 平和統一에 대한 5千萬 우리民族의 強烈한 意志를 表明하였는데 7個項으로 된 同共同聲明中 다음 3個項이 그 核心을 이루고 있다.

- ① 祖國統一은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三大原則에 따라 成就할 것
- ②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信賴回復을 위하여 相互 中傷·誹謗 및 武力挑發을 中止하고 軍事衝突防止를 위해 積極的인 措置를 取할 것
- ③ 民族的 連繫의 回復과 統一促進을 위하여 多方面의 交流를 實施할 것.

이같이 格調높은 合意內容을 담은 7.4 共同聲明에 따라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會議가 始作되었으나 北韓은 이 會談을 理念的 次元에서 政略的으로 利用하여 南韓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達成하도록 上下統一戰線을 形成하기 위한 手段으로 삼았기 때문에 以上 두 通路를 통한 南北對話는 原則問題에 관해서만 合意를 보았을뿐 實質事項에 들어가서는 이렇다 할 成果를 견우지 못하였다. 特히 南北調節委員會會談때 北韓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南北韓 軍縮·平和協定案을 되풀이해서 主張하였다. 結局 段階的·機能的 接近方式을 取하는 우리의 現實的인 立場과 「先統一·後機能統合」의 逆論理에서 政治·軍事問題의 一括處理를 主張하는 北韓側의 非現實的인 立場이 平行線을 걷는 가운데 會談은 膠着狀態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韓半島問題解決의 基本座標와 接近方式을 綜合的으로 明示할

必要를 느낀 朴正熙大統領은 73年6月23日 「平和統一外交政策特別宣言」을 發表하였다. 이 「6.23宣言」은 우리가 列強權力政治나 大國便宜主義의 犧牲이 되지 않도록 民族的 主体性을 가지고 自主的으로 國運을 開拓해 나가되 同時에 外向的·開放的 姿勢에서 國際協調와 大小國間의 調和에도 힘쓴다는 智慧로운 民族主義아래 平和統一努力을 積極化하는 次元높은 現實的 措置로서 南北韓間 相互不可侵, 內政不干涉, 南北對話의 繼續, 南北韓유엔同時加入, 衡平의 原則에 따르는 共產國家에의 門戶開放, 友邦과의 既存紐帶強化등 7個項目을 提示하였는데 이는 情勢變化에서 오는 國際政治上的 逆機能現象이나 不利要因을 極少化시켜 北韓의 偽裝平和攻勢에 逆攻勢를 取할 戰略的 布石을 하고 平和統一의 國際的 外延作業으로서 그 与件을 實質的으로 改善할 總力外交의 基盤을 다질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重要한 것이었다.

한편 北韓은 우리나라의 「6.23宣言」에 即刻的으로 拒否反應을 보여 같은 날 저녁에 金日成이 이른바 「祖國統一五大綱領」을 發表한 가운데서 南北間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平和協定の 締結), 南北間大民族會議의 召集, 南北聯邦制의 單一國号下의 유엔加入등 從來의 主張을 되풀이 하였는데 그 意圖하는 바는 一切의 國際的 要因을 捨象하여 統一問題를 純粹한 國內問題로 單純化시킴으로써 四大國을 主軸으로 하는 東北亞에서의 새로운 勢力均衡體制의 形成을 妨害하고 美軍의 南韓撤収를 促進시키는 가운데 再南侵 또는 南韓革命을 통한 共產化統一의 素地를 마련하려는데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北韓은 73年8月28日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시킨 後 南韓에 對한 武力挑發과 顛覆工作을 激化시켜 나갔다. (3)

## 2. 韓國問題에 關한 유엔에서의 外交的妥協

한편 이 時機에 있어서의 韓國問題와 「유엔」과의 關係를 본다. 北韓은 70年代의 「데탕트」趨勢에 便乘하여 統一政策과 關聯, 外交面에서 平和攻勢를 取하여 ①共産諸國 및 亞阿非同盟諸國과의 連帶關係를 強化하는 가운데 美國의 韓國問題에의 介入可能性을 最大限으로 줄이고 ②韓國을 國際社會에서 孤立시켜 南北韓問題를 民族內部問題로 轉化시키고 ③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있어 韓國보다 優勢한 外交的 地位에서 그들의 要求를 貫徹시키려 나갔다.

### (1) 第27次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 延期

72年9月の 第27次유엔總會에서도 前年總會에서와 마찬가지로 韓國問題討議 1年延期案이 可決되었다. 「언커크」의 活動中止, 駐韓外軍의 유엔旗使用禁止, 外國의 軍事的 不介入, 韓半島平和條約의 締結, 南北韓間 相互軍縮등을 提案하여 韓國問題를 非유엔化하려는 共産側의 平和攻勢앞에서 大韓民國이 推進한 不上程戰略이 成功을 見은것은 南北對話를 통해 韓國問題를 韓國人끼리 自主的·平和的으로 解決해 보겠다는 우리나라의 眞摯한 立場을 옳게 理解·評價하

여 友邦諸국이 韓國을 聲援·支持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이해의 「언커크」年例報告書는 「南北韓에 雙務的 接觸이 始作되었다해서 國際聯合의 韓國에서의 存在意義를 問題삼을 程度로 狀況이 變更된 것은 아니며 性急한 成功의 豫想아래 유엔의 存在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韓半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할 것」이라고 警告하고 「유엔에 의한 統一努力과 南北協商은 相互補完的인 것이며 유엔의 存続이 韓半島에서의 南北接觸에 貢獻하는 要素이다.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을 위해 유엔의 好意가 繼續 베 풀어져야 한다」고 力說하였다.

#### (2) 第28次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合意聲明採択

73年の 第28次유엔總會에서는 「6.23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에 立脚한 大韓民國의 對유엔 外交戰略과 이른바 「祖國統一五大綱領」에 立脚한 北韓의 對유엔 外交戰略이 激突하였다. 大韓民國을 支持하는 自由友邦이 ①「언커크」의 自進解体 ②駐韓유엔軍問題를 安保理事會에서 關聯當事國과 協議할 것 ③南北對話 歡迎 ④南北韓 유엔同時 加入 歡迎을 骨子로 하는 共同決議案을 提出한데 反해 北韓을 支持하는 共產 및 非同盟諸國은 ①「언커크」의 解体 ②駐韓外軍의 유엔旗 使用權 撤廢 ③유엔軍司令部의 解体 ④駐韓外軍의 全面撤收를 主張하는 共同決議案을 提出하였다.

유엔創設以來 처음으로 大韓民國代表와 北韓代表가 參席한 가운데 舌戰이 展開된 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過程에 있어 争點은 南北韓

유엔同時加入問題와 駐韓유엔軍撤収問題에 集注되어 双方이 팽팽히 맞섰으나 때마침 北京에서의 「키신저」·周恩來會談을 契機로 事態가 收拾되어 双方은 이 問題에 관한 票對決을 留保하고 南北對話의 繼續과 「언커크」의 解体에 관해서만 合意聲明을 發表하는 것으로 妥結을 지었다. 그리하여 韓國問題는 유엔의 後見아래 直接 當事者끼리의 自主的解決에 委任된 셈인데 韓半島平和와 같은 實質 問題의 討議를 유엔安保理事會에서 하자는 構想이 提起된 것은 새로운 進展이었다.

즉 北韓을 비롯하여 共産側이 「언커크」解体, 駐韓유엔軍司令部 解体등의 要求를 들고 外交攻勢를 激化시킨 71年의 第26次유엔總會以後 美國은 大韓民國 및 其他의 自由友邦과의 緊密한 戰略協議를 거쳐 韓半島의 平和(安保)·統一問題 解決方案에 새로운 彈力性을 賦与하기 始作하였으니 第28次유엔總會에 앞서 73年 9月 26日에 「키신저」美國務長官은 「美國은 韓國問題에 관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다른 關聯國들과 조용히 討議하는 것을 歡迎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리고 共同決議案에도 「유엔安全保障理事會가 韓半島平和維持와 韓國休戰協定의 遵守 및 保障을 위하여 直接的 關聯當事者들과 適切한 過程을 통해 韓國問題를 審議하기를 希望한다」는 項目이 들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政府는 73年 10月 27日 韓國問題에 관한 覺書에서 休戰履行을 위한 代案이 마련되면 駐韓유엔軍司令部의 將來問題가 檢討될 수 있음을 示唆하였으나 駐韓美軍에 관한 限 이는 韓美兩國의 主權에 屬하는 事項이어서 유엔에

서 拳論할 性格의 問題가 아니라고 主張하였다. (4)

### 3. 大韓民國統一政策의 特徵과 南北韓不可侵協定提議의 基本論理

이같이 第28次유엔總會에서 韓國問題가 妥結된 結果 韓半島에 平和體制를 構築할 必要가 國際적으로 切感되었는데 이 平和體制는 南北韓間의 自主的 相互保障이 實質적으로 先行하고 이 基盤위에 國際的 保障이 隨伴하는 二重構造的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點이 識者間에 指摘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後說한다. 이러한 狀況下에 美國은 東北亞地域에서 戰略的 均衡을 維持하면서 好戰勢力을 平和 共存테두리안에 끌어들이는 現實的 方案을 檢討하게 되었고 大韓民國도 北韓側의 「南北韓平和協定案」에 대한 積極的 代案으로서 朴大統領이 74年1月18日에 「南北韓不可侵協定」을 提議하였다. 이 提議의 內容과 特徵에 관해서는 後述하겠거니와 앞으로 韓半島平和 體制의 支柱를 이룰 潛在的 重要性을 가진 이 提議를 美國과 日本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建設的인 發想」이라고 歡迎하였다. 이어 朴大統領은 同年8月15日 그때까지의 統一政策을 綜合・統整하여 韓半島의 平和定着→南北韓交流를 통한 民族的 同質性과 相互信賴의 回復→南北韓自由選舉를 통한 政治的 統一의 完成이라는 「平和統一의 三大原則」을 闡明하였다. 이는 要컨데 平和統一哲學 (平和主義), 段階統一哲學 (機能主義), 自主統一哲學 (民族自決主義) 및 國際協調主義에 立脚하고 있으며 有機적으로 關聯되어 하나의

体系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特色이다.

이 段階까지 밝혀진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은 다음과 같은 平和統一의 大前提를 具體적으로 反映하고 있다. ①南北韓이 서로 相對方의 存在權을 認定하고 實力으로서 相對方을 併合하여 統一하겠다는 武力統一의 路線을 完全히 拋棄할 것 ②相對方을 弱화시키거나 征服하기 위한 直接·間接의 侵略行爲를 一切 拋棄할 것 ③相對方의 內政에 干涉하지 말 것 ④相對方에 대한 非難 등 政治的 先制攻擊을 完全히 中斷할 것 ⑤現在의 南北境界線인 休戰線에 대한 政治的·法的 根拠가 되며 韓國動亂時의 戰爭狀態의 中止에 대한 根拠가 되고 있는 休戰協定은 勿論 祖國統一을 위한 基本的 約束인 南北共同聲明을 誠實하게 지켜 南北對話와 南北交流를 推進하는데 서로 協力하고 共同努力을 傾注할 것. 結局 戰爭抑制과 祖國統一은 서로 關聯되는 가담에 「先平和·後統一」의 論理가 成立되는 것이며 우리로서는 南北韓關係를 安定된 平和共存關係를 거쳐 相互和解·協力關係로 까지 發展시킬 必要를 내다 보고 있는 것이다. (5) 그리고 平和定着의 措置로는 南北韓相互不可侵條約의 締結, 南北韓유엔同時加入, 國際的 共存(南北韓交叉承認) 등을 들고 있는데 그 中 韓半島에서의 戰爭抑制 및 平和定着을 위한 核心的 措置인 南北韓不可侵協定提議에 關係 보다 深層的으로 살펴본다.

이 南北韓不可侵協定提議는 ①南北韓이 絶對로 서로 侵略하지 않는다는 것을 滿天下에 公約할 것 ②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涉하

지 말 것 ③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위하여 現行 休戰協定の 効力を 存続시킬 것을 骨子로 하고 이 協定아래 「平和共存」을 하면서 對話와 交流로 平和統一의 基盤을 다져 나갈 것을 主眼點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滿天下에 公約할 것과 現行 休戰協定の 効力存続을 다짐한 것은 南北韓當事者間에 不可侵協定을 締結하고 周辺強大國들이 이들 共同으로 保障하거나 또는 그들間에도 이와 類似한 內容의 協定은 別途로 締結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釈된다.

이 提議의 基本論理와 特徵은 다음과 같이 集約된다.

첫째로 「先平和·後統一」의 原理에 따라 安定된 現狀維持를 志向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南北韓間의 平和共存을 追求하고 있다는 것이다. 軍事的·政治的 手段에 의해서 相對方을 吸收하는 政策을 回避하고 現在의 敵對的 對決狀態로 부터 中間的 共存(競爭) 및 나아가서 好意的 共存(和解·協調)의 方向으로 發展해 나갈 素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平和共存을 바탕으로 하여 漸進적으로 統一에 接近해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共存論理와 統一論理는 서로 矛盾되지 않는다.

셋째로 韓國戰爭의 暫定的 停止狀態를 完結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相互武力行使의 拋棄와 紛爭要因의 除去를 통해 平和를 定着시키려는 意圖가 內包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過去處理的인 平和協定的 性格과 戰爭을 豫防하려는 未來指向的인 不可侵協

定的 性格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北韓은 다음과 같은 理由를 들어 이를 拒否하고 나섰다

①韓半島의 平和를 沮害하고 韓半島의 統一을 가로막고 있는 美帝侵略軍의 南韓独占을 終熄시키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言及도 없다.

②平和를 實際로 保障할 수 있는 具體적인 內容이 包含되어 있지 않다.

③平和共存이란 서로 다른 國家사이의 關係에나 適用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 民族, 한 나라의 内部問題에 適用시킨다는 것 자체가 南北의 分斷狀態를 固定化시키기 위한 것이다.

以上과 같은 主張들이 宣傳效果를 노린 不當한 것임은 새삼 反証할 必要도 없다. (6)

#### 4. 北韓統一戰略의 本質과 南北韓軍縮 및 平和協定提議의 底意

70年代의 「레당트」趨勢에 対応하여 當面問題에 관한 戰術的 轉換을 決定한 北韓은 南北對話가 始作되자 「南朝鮮革命戰略」을 暫時 後線에 불러세우고 그代身 國際的 共感을 살 수 있는 南北聯邦制를 다시 登場시켰는데 60년에 처음 提議했을 때에 비해 軍事問題優先解決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 다르다.

實際에 있어 北韓의 統一戰略은 平和攻勢的 側面(駐韓外軍撤収, 平和協定締結, 軍縮, 政治協商, 民族會議, 南北聯邦制, 多方面的 合作·交流 등)과 暴力的 側面(人民民主主義革命, 對南戰爭 등)의 兩面성이

複合되어 왔는데 南北韓体制力量의 比較에 있어 自側이 優勢하거나 國際情勢가 自側에게 有利하다고 判斷할 때에는 吸收・征服을 指向하는 攻勢的(暴力的) 方案을 밀고 나오고 体制力量이 對等하거나 國際情勢가 有利하지도 不利하지도 않는 混迷狀態에 있다고 判斷할 때에는 靜觀的 姿勢를 取하고 体制力量이 劣等하거나 國際情勢가 不利하다고 判斷할 때에는 体制維持를 指向하여 守勢的(平和的) 方案을 밀고 나오는 臨機應變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70年代에 들어와서도 初期에는 共存을 통한 吸收戰略을 取하였다가 後에 体制維持戰略으로 後退하였다. (7)

이 段階까지의 北韓의 偽裝平和戰略의 發頭이라고 볼 수 있는 南北韓軍縮 및 平和協定締結에 관한 提議의 沿革과 底意를 綜合評價해 본다.

北韓의 南北韓軍縮提議는 1954年6月15日 「제네바」會談에서 南日이 第一 처음으로 提議했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後 56年6月25日에는 人民軍 8萬을 自進縮少하겠다고 宣言한바 있었으며 70年代에 들어 朴大統領이 「平和統一基本構想」을 闡명한 後로는 72年1月10日 南北韓不戰宣言 및 武力使用拋棄宣言을 提議해 왔고 72年6月25日에는 各己의 兵力을 15萬~20萬線으로 減縮하는 南北韓軍縮과 頂上會談의 開催를 提議해 왔다. 7.4 共同聲明에 이어 南北調節委員會會議가 進行되는 동안에는 73年3月18日의 第二次會議때 朴成哲이 다음과 같은 「軍縮5個項」을 提議하였으며 6月12日의 第三次會議때에도 이를 되풀이 하였다.

- ①南北韓이 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을 中止할 것
- ②南北韓의 兵力을 各各 10万 또는 그 以下로 減縮할 것
- ③外國軍隊를 撤収시킬 것
- ④外國으로부터의 武器, 裝備 및 軍需物資의 搬入을 中止할 것
- ⑤以上の 問題들을 解決하고 南北韓間에 서로 武力行使를 하지 않  
않을 것을 担保하는 平和協定을 締結할 것.

以上은 從前의 主張을 되풀이 한 것이지만 南北調節委員會會議席上에  
서 一括先決條件으로 내세운 것이 特色이었다. 그리고 73年 4月  
5日에는 美軍撤収를 條件으로 人民軍을 20万以下로 減縮할 用意가  
있다고 表明한바 있었다.

以上과 같은 軍縮提議와 더불어 北韓側은 南北韓平和協定の 締結  
을 強力히 主張해 왔다. 中共首相 周恩來가 71年 8月 10日 「뉴욕  
·타임스」紙의 「레스턴」記者가 會見한 자리에서 韓國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해야 한다고 主張한데 이어 72年 1月 10日 金日  
成은 日本読売新聞記者에게 ①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轉換시키고  
②平和協定締結後 美軍을 撤収시키고 ③美軍撤収後 軍縮을 實施할 것  
을 主張하였다. 7.4 共同聲明 發表後는 上述하다시피 73年 3月 18  
日의 南北調節委員會 第二次會議때 朴成哲이 軍縮 5個項 가운데서  
平和協定締結을 提議하였다. 그리고 南北調節委員會會議가 中斷된  
後인 73年 11月 5日에도 北韓의 副外相인 鄭準基는 「美軍의 韓半  
島駐留에 關係없이 平和協定을 締結할 用意가 있다」고 言明하였다.  
이 境遇에 있어 北韓側은 7.4 共同聲明이 政府間의 公式聲明이 아

니므로 南北韓戰爭狀態의 終結을 위해 새로운 平和協定을 締結할 必要가 있다는 名分을 내세워 왔다.

그런데 北韓側이 以上과 같이 南北韓軍縮 및 平和協定의 締結을 主張해 온 底意는 다음과 같이 分析되었다. 우선 國際的 側面에서는 ①四大強國의 對韓半島 現狀維持政策에 便乘하여 南北韓의 國際的·國內的 同格化를 企圖하고 ②國際的 緊張緩和 潮流에 便乘하여 北韓獨裁權의 對外的「이미지」를 平和的인 것으로 轉換시키고 ③美國의 反戰與論과 海外介入縮少政策에 便乘하여 美國의 對韓軍援의 削減과 駐韓美軍의 撤収를 誘導하고 나아가 休戰協定을 無力化하여 駐韓유엔軍司令部를 解体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對南戰略面에서는 ①國論分裂로 維新體制를 弱화시키고 ②北韓社會의 軍事體制的 特性에 따라 自己들은 軍縮의 影響을 받지 않으면서 軍事的 潛在力을 確保하는 反面 韓國의 實質的 軍事力을 一方的으로 弱化시키고 ③韓國內의 軍部와 對話推進派間의 分裂을 助長시키고 ④韓國內에 平和무드를 造成하여 韓國國民의 安保意識을 解弛시킨다는 것이다. (8)

### Ⅲ.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外交

#### 1. 北韓의 對美 平和協定提議

60年代末까지 「反美」를 外交政策基調의 하나로 삼고 駐韓 美軍撤収를 줄곧 主張해 온 北韓은 72年2月の 美·中共頂上會談以後 徐徐히 對美接近을 試圖하고 이른바 「人民外交」를 展開해 왔다. 그러다가 南北調節委員會會議過程에서 그들이 내세운 南北韓 軍縮 및 平和協定提議가 받아들여 지지 않고 그 代身 大韓民國의 朴大統領이 74年1月18日 南北韓不可侵協定을 提議하자 北韓側은 이를 即時 拒否하고 이로부터 2個月도 못되어 이번에는 美國에 대하여 平和協定締結을 提議하고 나섰다.

이 提議는 74年3月25日 最高人民會議 第二次會議때 「朝鮮에서 緊張狀態를 가시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한 前提를 마련하는데 대하여」라는 議題第三項에 관해 政務院副總理 兼 外相인 허담이 行한 報告가운데서 提起되고 最高人民會議의 名義로 美國議會에 傳達된 것이다.

以下 그 內容과 그들의 底意를 살펴본다. 上記한 허담의 報告는 「軍事停戰協定은 그 自体가 이미 남았으며 많은 面에서 現實에 適應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는 平和協定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主張하고 大韓民國이 提議한 不可侵協定은 北韓이 提議한 平和協定에 反對하기 위한 것이라고 非難하였다. 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의 對美平和協定提議는 大韓民國이 提議한 不

可侵協定案이 國際的으로 好意的인, 反應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하여 反應을 加하려는 意圖에서 提起된 것이었다. 그리고 허담은 同報告에서 「오늘날 韓半島에 造成되고 있는 緊張狀態와 戰爭威脅에 대한 責任이 美國政府當局에 있다」고 指摘하고 「나라의 統一問題를 解決하려면 이 問題를 南北當事者들 사이에서만 論할 것이 아니라 萬方途를 찾아야 한다」느니 「現條件下에서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確實히 担保할만한 實權을 가진 當事者들끼리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应当하다. 北韓과 美合衆국은 韓國停戰協定の 締結 雙方이며 實際上的 當事者들이다」느니 主張하여 直接當事者인 大韓民國을 協議對象에서 除外시키려 하였는데 이것은 韓半島의 平和 및 統一問題를 南北韓間에 自主的으로 解決하기로 한 7·4 共同聲明의 精神에 正面으로 違背되는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北韓으로서는 大韓民國의 國際的 地位를 格下시키고 韓美兩國을 離間시켜 보려고 노렸던 것이다.

四個項目으로 된 對美平和協定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雙方은 서로 相對方을 侵犯하지 않을 것을 誓約하고 直接的武力衝突의 모든 危險性을 除去할 것. 美國은 韓半島의 內政에 一切 干涉하지 않는데 대한 義務를 질 것.

(2) 雙方은 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을 고만두고 一切의 武器·作戰裝備 및 軍需物資의 搬入을 中止할 것.

(3) 駐韓外國軍은 유엔軍의 名稱을 除去하고 가장 빠른 期間內에 一切의 武器를 가지고 모두 撤收할 것.

(4) 南韓에서 모든 外國軍이 撤収한 뒤 韓半島는 그 어떤 外國의 軍事基地나 作戰基地로도 되지 않을 것.

우리는 現軍事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는 問題를 討議할 것을 美合衆國에 正式으로 提議한다.」

앞서의 南北韓平和協定案과 比較해 볼때 對美平和協定案에는 南北韓 減軍에 關係서 言及이 없는 代身 美國의 韓半島內政에 對한 不干渉과 韓半島에서의 外國軍事基地 및 作戰基地 不許容을 規定하는 項目이 들어 있는 點이 다른데 이 提議의 主目的이 駐韓美軍의 撤収를 貫徹하려는 데 있었음은 더 말할 必要도 없다. 따라서 以上 4 個項目中的 核心은 第3項과 第4項에 있었다. 이들의 項目은 結局 유엔軍이라는 名分을 剝奪하여 駐韓美軍의 撤収를 促進시키고 韓半島에서 戰爭이 再發하더라도 다시는 美國이나 民主諸國의 軍隊가 韓國을 支援하거나 韓國에 駐屯하지 못하게 하자는데 그 底意가 있었다 하겠다. 즉 그들은 韓半島의 軍事均衡을 破壞하여 武力南侵이나 南韓內의 革命을 통하여 韓半島를 共產化統一할 條件을 造成하려 하였던 것이다.

다른 底意는 韓半島問題를 美國과의 關係로 連結시킴으로써 對유엔外交에서 보다 有利한 高地를 차지해 보자는데 있었다.

즉 北韓은 對美平和協定 締結을 提議함으로써 韓國問題는 南北對話로는 到底히 解決될 수 없다는 印象을 全世界에 줄과 同時에 駐韓美軍撤収主張을 유엔總會에 까지 물고 들어가 이를 貫徹시키는 方向으로 國際輿論을 喚起시켜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다른 底意는 大韓民國의 國威를 失墜시킴으로써 相對的으로 그들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키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平和協定の 提議를 통하여 마치 그들이 平和愛護國인 樣 國際的 「이미지」를 造作하고 나아가 強大國인 美國과 相對하리만큼 그들의 國際的 地位가 向上되었다고 誇示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밖에도 北韓의 對美平和協定 提議에는 美國의 輿論을 「反韓國的」으로 誘導함으로써 美國政府에 對韓援助를 中斷하고 駐韓美軍을 撤收시키도록 壓力을 加하려는 底意가 숨어 있었다. (9)

## 2. 國際的 外交對決의 復活

北韓은 美國에 대하여 雙務的 平和協定締結을 提議한데 이어 유엔內外에서 偽裝平和攻勢를 取해 왔다. 그리하여 74年의 第29次 유엔總會에서는 共產側 決議案이 外勢의 干涉을 排除한다는 名目下에 全外軍의 撤收를 要求하여 韓半島現在의 安保構造를 顛覆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었음에 反하여 西方側 決議案은 韓半島現在의 安保構造를 保全하면서 安保理事會 主管下에 韓半島에 보다 나은 平和體制를 構築함으로써 窮極的으로 統一達成에도 寄與할 것을 主眼點으로 한 것이었는데 票決에 불인 結果 西方側決議案이 通過되고 共產側決議案은 可否同數로써 否決되었다. 이 當時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은 74年 11月 서울에서의 韓美頂上會談後 發表된 共同聲明에 잘 要約되고 있는 바와 같이 南北韓間의 對話에 의한 緊張解消努力을 支持하며 南北韓이 平和共存하고 蘇聯과 中共이 韓國

을承認한다는條件下에北韓을承認할用意가있다는것이어서朴大統領의6.23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에同調하고있음을表示하였다.

한편75年4月強大國勢力均衡의死角地帶인印度支那에서의地域紛爭이美國의不介入으로말미암아印支三國의共產化로써終結되는衝動的인事態가發生하고이들契機로적어도亞細亞太平洋地域에서四大國間의「데탕트」氣運이後退하자北韓은이에便乘하여速戰速決式局地戰을하기위한對南戰爭準備를露骨化시킴과아울러國際舞臺에서는이른바「國際革命力量과의紐帶強化」를위해非同盟中立主義國家群에과들어가서外勢의干涉없이統一問題를解決한다는名目下에偽裝平和攻勢를激化시키는二重性을加增시켜나갔다.그러나多幸히도우리나라는總和維新體制를加一層強化하는가운데精銳한自主國防力과堅固한自衛意志로總力安保態勢를굳혀나갔다.또한印支事態後亞細亞政策과太平洋戰略을全面的으로再檢討한美國도韓美日三角安保協力體制를再確認하고美·蘇·中共三者間의相互牽制的勢力均衡下에蘇·中共의어느쪽도北韓의武力挑發을支援하지못하도록하는한편韓國이共產侵略에對備하여自國을守護하려는意志와能力을갖추고있는限韓國을強力히支援해줄것임을다짐하였다.그러면서또한편으로는南北對話의再開와韓半島平和體制의構築을向해努力할것임을表明하고이를위해北韓과密着하고있는中共과의關係를改善하기에注力해나갔다.우리나라도이에同調하여

北韓에 대하여는 南北對話의 無條件再開를 促求함과 아울러 当事者  
會談의 開催 및 平和統一의 條件造成을 위해 對非同盟外交와 對共  
産圈外交를 友邦의 힘을 빌림이 없이 單獨으로 展開해 나갔다.<sup>(10)</sup>

### 3. 韓半島休戰当事者會談 構想의 發表

韓半島平和體制 構築과 關聯하여 韓美兩國이 「先平和·後外軍  
撤収」의 主張을 固守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과 中共은 「先外軍撤  
収·後平和」의 主張을 堅持하고 있음으로 이들 間의 異見을 調整  
하기 위하여 會談을 열 必要가 느껴졌다. 그리하여 75年 9月 22  
日 「키신저」美國務長官은 第 30次 유엔總會에서 行한 政策演說가  
운에서 韓半島休戰当事者會談을 提議하였다.

이 「키신저」提議는 韓半島問題에 關하여 具體적으로 다음과 같  
은 段階措置를 設定하였다. 즉 第一段階에서는 韓·美·中共·北韓  
四者間에 休戰当事者會談을 열어 駐韓유엔軍司令部 解体問題와 關聯  
해서 休戰協定 代案을 講究하고 第二段階에서는 以上の 四者에다  
蘇聯과 日本을 添加한 六者間에 擴大國際會議를 열어 韓半島와 東  
北亞의 平和 및 安全을 위한 多邊協定(國際條約)의 締結等 보다  
根本적인 措置를 協商하고 以上の 第一·第二段階를 거치는 동안의  
附隨措置로서 窮極的 統一에 支障이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南北  
韓이 다같이 유엔에 加入하고, 美·日과 中·蘇가 南北韓을 交叉承  
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大韓民國이 休戰協定 調印國이 아니라는  
理由로 当事者會談에서 排除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는데 이는 北韓

의 對美平和協定 提議에 대한 公式的 拒否反應이었다.

이러한 未來指向的인 「키신저」構想은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韓半島問題의 本格的解決을 試圖해 보겠다는 中長期政策의 發動이라는 것이 그 特徵이었는데 이는 世界的 和解政策의 一環으로서 相互主義原則에 立脚하고 있으므로 世界的 規模로는 美·蘇·中共間의 三極均衡과 東北亞的 規模로는 南北韓 및 周辺四大國間의 利害調和를 前提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實現까지에는 豫備交渉·幕後協商등 많은 曲折을 거쳐야 할 것으로 豫想되었다. 여기서 또한가지 留念할 것은 「키신저」構想이 意圖하는 當面の 效果가 韓半島와 關係없고 韓半島實情을 잘 모르는 會員國들의 無責任하고 無分別한 言動으로 輕率하게 處理될 危險性이 있는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를 그 테두리밖으로 끌어내어 韓半島周辺關係國間에 韓半島問題 討議의 새 舞台를 마련하고 이러한 外廓的 霧囿氣 가운데 南北對話를 再開시키려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11)

#### 4. 第30次유엔總會에서의 對決과 그後의 動向

78年8월에 北韓이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한 後 北韓의 南侵準備促進, 偽裝平和攻勢強化등으로 高潮된 南北韓間의 外交的·軍事的 對決狀況은 75年의 第30次유엔總會에서의 韓半島問題를 둘러싼 一大外交決戰에 象徴적으로 集約되었다. 西方側 決議案의 原案은 「유엔軍司令部의 解体를 위하여 韓國軍과 駐韓美軍이 유엔軍司令部의 責任을 引受할 用意가 있으며 이와 關聯하여 直接當事者

및 安保理事会 理事国間의 協議를 促求한다」는 것이었는데 得票力을 增大시키기 위하여 最終적으로 採択된 西方側 修正決議案은 ①南北對話의 繼續을 促求하고 ②모든 直接当事国이 休戰協定 代案 및 恒久的인 平和保障을 指向하는 協商을 開始할 것을 希望한다는 것등을 主要骨子로 하는 것으로 單純化되었다. 이에 反하여 共產側 決議案은 유엔軍司令部의 無條件解体, 駐韓外國軍의 撤収,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代替, 南北韓의 軍備縮少등을 要求하였는데 그 底意는 現在의 休戰體制를 破壞하여 韓半島의 軍事的 均衡을 北韓側에 有利하게 만들면서 南侵 또는 南韓革命을 통한 共產化統一의 機會를 마련하려는데 있었다.

以上の 兩決議案을 票決에 붙인 結果는 政治委員會의 段階에서나 本會議의 段階에서나 兩決議案이 多같이 通過되는 異變을 낳았다. 이처럼 韓國問題라는 單一의 議題에 關하여 本質적으로 相反된 兩個의 決議案이 同時에 採択된 것은 前例없는 일이며 그만큼 「유엔」의 權威가 失墜되었다. 이 事實은 또한 「유엔」이 韓國問題를 둘러싸고 兩陣營間에 伯仲之勢를 들어냄으로써 韓國問題에 關한 限 能力의 限界에 到達하였음을 如實히 證明하였으며 따라서 今後 韓半島問題는 「유엔」을 통해서가 아니라 南北韓間의 直接對話나 모든 当事者間의 協商을 통해서 解決하는 수 밖에 없다는 論理를 뒷받침 해 주었다.

第30次 유엔總會後에도 北韓은 南北對話에 應하기를 拒否할 뿐 만 아니라 「유엔」테두리밖에서의 当事者會談에도 反對하고, 도리어

韓半島問題를 「유엔」안에 繼續 끌어들여 共産側 決議案을 貫徹시키려고 執拗하게 움직여 나갔다. 또한 美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하여 駐韓美軍의 撤収를 促進시키려고 美國에 대한 平和攻勢에 拍車を 加해 나갔다. 그리고 韓半島内에서는 印支事態後 韓美共同防衛體制가 強化되었기 때문에 從來의 軍事面의 速戰速決戰略을 止揚하고 그 代身 「파리」平和協定을 맺은 後 內戰을 통하여 共産化統一을 達成한 「베트남」方式을 韓半島에서도 試圖해 보려고 長期的 波狀攻勢戰略으로 轉換하고 있는 것으로 觀測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挑戰的 狀況에 對処하여 大韓民國으로서는 希望의 理想主義에 사로잡히는 일없이 冷徹한 現實感覺과 未來指向의 彈性을 아울러 갖춘 가운데 和戰兩略을 併進시켜 對內的으로 政治·軍事面의 對策을 強化함과 同時에 對外的으로 유엔外交와 外交政策 全般을 再定立하여 強力히 執行해 나갈 것이 時急히 要請되었다. 유엔外交와 關聯하여 國內一部에서는 韓半島問題를 脫유엔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論議도 있었으나 万若에 그것이 韓國問題를 유엔으로 부터 完全히 離脱시키고 韓國과 유엔과의 關係를 스스로 斷絶시킬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北韓이 韓半島問題를 유엔에 繼續 上程하여 그들의 主張을 貫徹시키려 하고 있는 만큼 危險한 敗北主義的 現實逃避라는 點이 指摘되었다. 그러나 유엔에 지나치게 依存하여 韓國의 安保와 國家的 運命을 事實上 유엔에 委託해 온 從來의 態度를 止揚하여 毅然한 自主的 姿勢에서 幅넓은 外交活動을 展開한다, 즉 「유엔」과 韓半島周邊四大國

과 南北韓을 同心円上에 複合적으로 配列하여 「유엔」의 權威와 國際的 支持를 背景으로 「유엔」의 테두리밖에서 南北韓과 周辺強 大國이 參與하는 當事者間 國際會議를 열어 東北亞平和體制의 構築 을 통한 段階的 平和統一에의 接近에 繼續 「이나샤티브」를 取해 나가야 한다는 點이 強調되었다.

朴大統領은 75年 11月 26日 AFP 記者와의 单独會見에서 南北韓이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定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金日成과 만 날 수도 있다 (즉 南北韓頂上會談을 開催할 수도 있다)는 積極 的 姿勢를 보였고 또한 中共과 蘇聯이 亞細亞의 平和와 世界의 平和를 希望한다면 北韓共產集團의 軍備擴張을 支援하지 말 것이며 「키신저」提案에 대해서도 否定的 姿勢를 止揚해야 한다고 忠告하 였다. 한편 美國이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해 最善을 다할 것이 라는 點은 同年 12月의 「포드」大統領의 「新太平洋宣言」에서도 強力히 再闡明되었다. (12)

##### 5. 第 31 次 유엔 총회에서의 韓國問題 票對決 回避

76年에는 韓半島問題와 關聯하여 유엔에서 豫想치 않았던 事態가 發生하였다. 즉 共產側이 韓半島問題 決議案을 先制提出하 였으므로 西方側도 이에 対応해서 決議案을 提出하여 兩陣營이 모 두 得票工作에 專念하던 中 開幕 直前に 北韓側 要請에 따라 共產側이 同 決議案을 撤回하였으므로 西方側도 決議案을 撤回하여 結局 韓半島

問題가 全然 討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北韓側이 이같이 共產側 決議案을 撤回케 한 理由로는 同年 8 月の 第 5 次 非同盟會議때 自己들의 強硬路線이 支持를 받지 못하였으며 8.18 板門店 蠻行事件으로 北韓의 評判이 共產圈 内部에서 까지 失墜되었는데 反하여 当事者間의 協議를 促求하는 西方側 決議案의 論理가 合理的이어서 非同盟國에까지 먹혀들어가고 있었으므로 共產側 決議案이 通過될 可望이 없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그밖에도 北韓이 權力鬭爭·經濟危機등 深刻한 内部問題를 안고 있는데다가 毛沢東死亡後 中共의 對外政策이 流動狀態에 있어 對 유엔 外交에 一旦 制動을 걸고 政策과 態勢를 再整備할 것이 必要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北韓의 決議案撤回措置가 單純한 戰術的 後退나 아니면 政策變化나 戰略轉換을 意味하느냐에 관해서는 斷定을 내리기 어려우나 大体로는 이를 戰術的 後退로 보고 北韓은 勝算만 있으면 앞으로도 유엔에서 票對決을 試圖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側이 많았다. (13)

한편 「키신저」 美國務長官은 9 月 30 日 유엔總會演說을 통해 韓半島 休戰 当事者會談에 관하여 修正提議를 하였는데 이는 「出發點서부터 南北韓과 美國·中共間의 四者會談으로 始作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南北韓이 豫備會談을 열 것」을 提議하였다.

이 修正提議는 当初 美國務省에 의해 作成되고 訪美中인 朴東鎭大韓民國外務部長官의 同意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豫備會談의 段階에서 南北韓을 主体로 내세운 것은 韓半島問題가 南北對話

를 基軸으로 해서 解決되어야 한다는 點을 強調한 것이어서 매우 注目되는데 事實 「키신저」長官도 이 修正提議를 함에 있어 韓國을 除外한 美國과 北韓間의 直接協商은 決코 있을 수 없다고 再次 못박았다.

#### IV. 韓半島平和의 制度的 保障方法에 관한 諸論議

第二局面을 통해 國內學者間에 나타난 韓半島平和의 制度的 保障方法에 관한 代表的 論議內容을 다음에 集約해 본다.

##### 1. 基本原則과 接近方法

韓半島平和를 制度的으로 保障한다거나 韓半島에서 「平和體制」 「平和秩序」 또는 「平和構造」를 構築한다는 것은 東西冷戰의 爆發現象이었던 韓國戰爭의 遺産으로 20餘年間 持續되어 온 南北 韓間의 「對抗體制」(休戰體制)를 脫皮하여 韓半島全體의 平和와 安全을 確保하는 體制로 移行함을 意味한다. 具體적으로는 「休戰體制」를 어떻게 終結시키며 이에 이어 成立될 平和體制가 어떠한 形態와 性能을 갖추어야 하는가가 問題가 되는데 이에는 다음 세가지 側面이 隨伴된다.

(1) 앞으로의 南北關係의 基本論理를 어떻게 定立하는가 하는 것이다. 特히 政治的·軍事的 關係를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가 問題

가 되는데 이에 관해 原則의 合意를 보고 合法化시킬 것이 必要하다.

(2) 南北關係의 새로운 形成에 따라 南北韓 各己의 内部体制를 어떻게 再編成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난 4半世紀동안 南北韓은 異質的인 理念과 体制아래 對立해 왔으나 脫冷戰의 平和体制에 適應하려면 이러한 既存体制의 政治的 性格을 修正하거나 体制自體의 再編成이 不可避하다.

(3) 韓半島의 平和体制 構築과 더불어 形成될 東北亞의 새 國際秩序속에서 韓半島의 國際政治的 位置를 어떻게 定立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韓半島로 하여금 東北亞秩序속에서 어떠한 國際的 地位를 갖게하며 韓半島平和体制에 대하여 어떠한 國際的 保障을 確保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韓半島에 平和体制를 構築하는데 있어 現實的으로 妥當視되는 基本原則은 ①南北韓間 「平和共存」의 原則과 ②이를 國際적으로 認定하는 「現狀維持」의 原則이다.

平和体制의 意味를 擴大하면 「平和」·「共存」·「統一」이라는 諸理念과 相通되는데 現時點에 있어 問題의 核心은 南北韓이 다같이 「平和共存」과 「現狀維持」의 原則에서 즉 統一의 目標에는 이르지 못하는 線에서 政治的 合意에 到達하고 이를 實踐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中 「平和共存」의 原則은 南北韓間에 体制의 敵對的 性格에도 不拘하고 政治的 妥結을 이루어 나간다는 原則이며 따라서 平和体

制를 構築하는데 있어서는 「共存体制」부터가 어떤 形態로든 間에 規範化되어야 한다. 現在까지 南北韓關係는 基本的으로 「韓國休戰協定」이라는 軍事協定에 의하여 規制되어 왔는데 同協定 第5條 附則 62項은 南北韓關係의 「平和的인 政治的 解決」을 豫見하고 있는 만큼 이 規程이 바로 韓半島平和体制로 接近해 나갈 根拠가 된다. 具體적으로 말해서 韓半島에 平和体制를 構築하기 위해서는 우선 現在까지 休戰協定이 管理해 온 一時的인 停戰狀態를 凍結하여 戰爭을 公式적으로 終結시키는 終戰措置를 取하고 休戰線을 平和化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休戰協定(平和條約)으로 代置해야 하는데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非武裝地帶를 平和적으로 利用하고 南北韓이 軍事的 均衡을 維持한 가운데 武力挑發과 戰爭을 抑止할 것임을 相互不可侵條約의 形式으로 서로 法的으로 規定하여 南北韓間의 軍事的 秩序의 線을 政治的 秩序의 線으로 그 性格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現狀維持」의 原則은 主로 政治的·軍事的 現狀凍結을 基盤으로 하는 南北韓의 平和共存關係를 國際적으로 實質上 保障받는다는 原則을 말한다. 南北韓間의 勢力均衡은 韓半島에 利害關係를 가진 列強의 國際的 保障없이는 維持될 수 없다. 韓半島에서 南北關係의 現狀維持를 列強이 破壞치 않는다는 것이 事實上 南北韓平和共存을 保障하는 論理的 基盤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留意해야 할 것은 앞으로 韓半島에 樹立되어야 할 平和体制의 本質에 비추어 過去와 같이 國際的 保障이 全的으

로 優先하지를 말고 南北韓間의 自主的 平和關係에 대한 相互保障이 優先하는 基盤위에서 國際的 保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点이다. 事實에 있어서 大韓民國은 休戰協定の 当事者가 아니라는 点을 考慮하여 앞으로는 韓半島平和體制에 責任있는 当事者로 參與하여야 하며 그런 意味에서 南北會談과 유엔總會 韓國問題討議의 緊要성이 있는 것이다. 万若에 韓半島의 休戰線이나 平和保障機構에서 유엔的 性格이 사라질때 南北韓은 直接 軍事對決을 하게 될 危險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韓半島의 平和體制는 南北韓間의 自主的 平和相互保障體制를 優先시키고 國際的 保障은 次善的 措置에 머무르게 하는 二重的 保障을 期할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가지 考慮해야 할 点은 既述하였다 시피 韓半島의 解決이나 韓半島平和體制的 構築에 있어서는 平和共存과 現狀維持가 基本原則이 되고 있기는 하나 西歐人의 경우 모양으로 이러한 原則의 適用이 實質的으로 韓半島分斷의 固定化를 意味하지를 않고, 韓民族의 歷史性에 비추어 現狀維持와 現狀變更(打破), 分斷과 統一이 正面으로 相馳된 兩極的狀況이 아니라 轉移될 수 있는 流動性을 지니고 있는만큼 韓半島情勢는 以上の 두가지 可能性이 交合된 中間的 性格, 二重的 性格을 띠우고 있다는 点이다. 다시 말해서 現狀속에 平和共存이 制度化되면 人的·物的 相互交流를 통해 民族的 親和感을 되찾아 統一에 이를 可能性이 있으므로 韓民族에 있어서는 平和共存이 弱極的으로 統一로 連結지어질 수 있고 또한 連結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또한가지 銘心할 것은 平和体制를 構築하는 것이 周辺強  
大國에 있어서는 東北亞에서 緊張을 緩和하기 위한 「手段」일지  
모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全民族의 死活을 左右하고 生存樣式을  
決定하는 統一問題와 關聯되는 「目的」이라는 點이다. 그러나 平  
和体制가 構築된 가운데 統一이 이루어졌다 해서 모든 目的이 다  
達成된 것은 아니고 平和統一後에도 새로운 達成해야 할 目標가  
繼續 設定되고 追求어야 하는 것이다. 例컨대 民族的 合意에 따라  
理念과 体制를 再定立하고 周辺強大國 및 國際社會의 모든 構成國  
과 友好·協調關係를 맺는 가운데 國家的·民族的 生存, 發展, 繁榮  
및 福祉를 누려나간다는 것이다. (14)

## 2. 準拋類型과 關聯된 諸發想

現存하는 休戰体制는 그 性格上 雙務的이며 對立的이다. 大  
韓民國의 實質的 安全保障은 「韓美相互防衛條約」이 核心이 되어  
왔고 北韓의 安全保障은 「朝蘇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과 「朝中共  
友好協力 相互援助條約」에 依存해 왔으므로 韓國休戰体制는 對抗體  
制임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休戰協定의 直接當事者는 유  
엔을 代表한 美國을 一方으로 하고 北韓과 中共을 他方으로 하고  
있을뿐 南北韓間에는 安全과 平和를 保障할 아무런 軍事協定도 存  
在치 않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韓半島에 平和体制를 構築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個의 二邊條約을 主軸으로 한 對抗體制를

如何히 多邊化하여 四強이 多같이 參與하는 國際型 安全保障體制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問題이다. 그리고 「平和體制」로의 移行中이나 移行後의 또하나의 큰 問題는 南北韓關係에서 軍事的 均衡이 이루어지고 平和의 尊重이 約束되었다 할지라도 北韓이 共產化統一을 위해 政治戰이나 心理戰의 性格을 띤 「間接侵略」의 手段을 動員할 때에는 不可侵條約이나 國際保障이 何等 效力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點이다. 이러한 危險까지를 排除하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의 理念, 體制上的 兩極的 對立性을 緩和·收斂시키는 方向으로 雙方이 內部調整을 할 것이 關聯課業으로 提起될 것이다.

그런데 韓半島平和體制를 構築하는데 있어 準拠하여야 할 基本類型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示唆되어 왔다. (15)

#### (1) 로카르노體制

「로카르노」體制(The Locarno System)는 第一次世界大戰後 歐羅巴에 形成되었던 二重的 安全保障體制를 말한다. 이 體制를 成立시킨 「로카르노」諸條約中の 第一群은 獨逸·仏蘭西 및 白義耳間의 集團的 安全保障을 規定하고 있었다. 즉 獨逸은 仏蘭西나 白義耳를 그리고 仏蘭西나 白義耳는 獨逸을 攻擊하지 않을 것을 約束하였고 「벨사이유」條約 第42條 및 43條의 規程에 따라 「라인」左岸의 獨仏間 非武裝地帶의 現狀維持를 約束하였다. 또한 以上の 三國中 어느 한 나라가 이 約束을 破壞할 때에는 다른 当事國이 이를 侵略行爲로 認定하고 必要에 따라 被侵國을 即刻的

으로 援助할 義務가 있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었다. 그리고 諸條約中의 第二群은 獨逸이 仏蘭西를 攻陷하였을 때에는 白義耳뿐만 아니라 英國과 伊太利도 함께 仏蘭西를 도와야 한다고 規定하여 仏蘭西에 保障을 주었으나 仏蘭西로부터는 保障을 받지 않은 片務的 保障을 하고 있었다.

## (2) 東西獨共存體制

이 體制는 美·蘇를 中心한 周邊 四大國(英·仏을 添加)의 同意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1971年 9月 3日 伯林에 관한 四大國協定이 締結된데 이어 東·西獨은 72年 5月 26日 兩獨間交通에 관한 協定을 締結하였다. 또한 西獨議會는 70年 8月 12日에 締結한 獨蘇不可侵條約을 72年 5月 22日 美國의 同意下에 批准하였다. 이어 72年 11月 8日에 美·蘇·英·仏 四大國은 東西獨의 유엔加入을 支持하는 宣言을 採択하였으며 同年 12月 21日에는 東西獨이 兩獨基本條約을 締結하고 73年 6月 22日 安保理事會의 滿場一致可決로 유엔에 加入하였다. 東西獨의 경우는 南北韓의 경우처럼 敵對意識이 強하지 않았고 周邊四大國間에 이미 여러가지 合意文書가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이 有利하게 作用하였다.

## (3) 유엔安保理事會 關與下의 東北亞集團安保體制

이는 從來의 地域的 集團安保體制의 發生經緯와는 正反對로 유엔安保理事會의 主導(決議文 採択 등)下에 東北亞에 「칼·도이취」가 말하는 바와 같은 「複合的 安保共同體」(Compound Security Community)를 形成한다는 것이며 內外與件의 成熟에 따라서는 換

地利的 中立化統一의 先例도 있드시 모든 当事者間의 合意로 이러한 共同体 속에서 南北韓의 政治的 統一을 實現시키는 「現狀의 平和的 變更」을 期待할 수도 있을 것이다.

75年의 第30次유엔總회가 끝난 後 筆者는 當面한 安保對策과 東北亞平和의 制度化 構想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私見을 國際學術會議席上에서 披瀝한 바 있었다. (16)

多少 樂觀的·理想主義的 色彩를 띤 것이기는 하나 韓半島의 特殊狀況에 비추어 以上 列挙한 準拠類型을 고루 配合한 가운데 多角的·前進的 解決方向을 指示하려 한 점이 特色이라면 特色이라 하겠다.

『過去에는 南北韓間의 軍事關係가 直接的 關係가 아니라 間接的 關係였다. 20餘年間 持續되어 온 休戰體制는 유엔이라는 紛爭解決機構를 媒介體로 하여 南北韓間의 軍事的 對決을 回避하도록 組織된 「安保體制」였다. 그런데 오늘날 韓半島에서 發生하려 하고 있는 本質的 變化는 이와 같은 南北韓間의 間接的 軍事關係가 直接的 軍事關係로 轉入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駐韓유엔軍司令部가 解体됨과 同時에 그 代案으로서 1950年以來 美軍에 移讓되어 온 「作戰指揮權」이 韓國에 還元된다면 南北韓間의 軍事關係는 直接化된다. 이렇게 되면 非武裝地帶에 유엔平和監視委員會(또는 軍)이라도 配置하지 않는限 韓國軍이 北韓軍과 直接 對峙하여 和戰에 對해 一次的 責任을 지게 된다.

여기에 있어 南北韓間의 戰爭抑止 즉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保障을 如何히 規範化하고 制度化할 것인가 하는 것이 當面의 基本課題로서 浮刻되는데 다음에 그 豫想할 수 있는 方案을 列挙해 본다.

### (1) 韓·美·日間

① 當事者會談을 통하여 韓國休戰協定代案이 講究될 때까지는 南北韓間에 軍事的 均衡을 維持하고 北韓의 對南武力侵攻을 抑止하기 위하여 韓美相互防衛條約에 依拠 兩國間의 共同防衛體制를 더한層 鞏固히 함과 同時에 韓·美, 美·日間의 二邊的 軍事同盟關係를 間接적으로 連結하여 韓·美·日 三國間의 安保協力態勢를 整備 強化한다.

② 休戰協定代案이 講究되고 이에 따라 解体하게 되는 駐韓유엔軍司令部로 부터 作戰指揮權을 還元받은 後에도 東北亞平和體制가 確立될 때까지는 和戰에 관한 政策決定을 도우기 위하여 現存하는 韓美安保協議會를 兩國間의 軍事協議機構로 常設化한다.

### (2) 南北韓間

① 南北對話를 再開하고 既存의 南北調節委員會의 發展的 專門化 措置로서 南北韓軍事分科委員會를 設置한다.

② 南北韓不可侵協定을 締結한다.

### (3) 周辺四大國과 유엔

① 유엔總會는 南北韓間의 對話再開와 韓半島問題當事者會談의 開催를 促求하는 決議案 또는 共同聲明을 採択하고 그 以上은 韓

半島問題의 討議에 關与하지 않는다. 事前折衝을 거쳐 南北韓 및 美·中共의 四者는 「韓半島平和에 관한 直接当事者會談」을 開催하여 南北韓不可侵協定을 確認하고 美·中共議定書를 採択한다.

그리고 駐韓유엔軍司令部의 解体와 同時에 유엔安保理事會의 새로운 決議에 따라 유엔韓半島平和監視委員團(또는 軍)을 非武裝地帶에 配置하는데에 合意한다. 但 南北韓이 다음의 擴大國際會議 段階에 이를 때까지 各已 既存의 軍事同盟關係를 維持하는 것을 容認한다.

③ 유엔安保理事會가 上記한 直接当事者會談의 結果에 따라 駐韓유엔軍司令部의 解体와 유엔韓半島平和監視委員團(또는 軍)의 新設을 決議한다.

④時機의 成熟과 條件의 整備를 기다려 南北韓과 周邇四大國이 「東北亞平和 및 韓半島統一을 위한 關聯者會議」를 開催하여 東北亞平和體制의 構築과 韓半島의 平和統一에 관한 國際協定을 締結하거나 議定書를 採択한다.

以上을 全體로 묶어 볼때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亞平和體制는 「르카르노」式 二重保障을 유엔安保理事會 關与下의 集團安保와 連結한 獨特한 形態를 取하게 되는 것이며 窮極的으로는 國際聯合亞細亞本部를 統一韓國에 設置하여 韓半島를 聖域化시킨다는 野心的 方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巨視的·未來指向的 觀點에서 平和 및 統一戰略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提言한 學者들이 있다. (17)

(1) 南北韓間에 交流와 協力을 통해 統一基盤이 造成된 後에도

한꺼번에 堅固한 單一政治體制로 突入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느슨한 結合」(a loose form of Association)에서 出發하여 「보다 緊 統一」(a tighter form of Unification)로 發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初期段階에는 歐洲 共同體와 같은 「共同體」(Community)의 形態를 떠든지 英聯邦과 같은 「聯邦」(Commonwealth)의 形態를 떠든지 또는 美國이 建國初에 取했던 「國家聯合」(Confederation)의 形態를 取해야 할 것임을 意味한다. 따라서 北韓이 主張하는 代로의 聯邦制는 그 內容의 不合理性과 非現實性을 따져서 反對하더라도 聯邦制라는 概念自体가 韓半島의 統一에 全혀 適用可能性이 없다는 式의 反應은 止揚하고 條件이 成熟할 때 考慮할 수 있는 聯邦制를 韓國나 淸代로 미리 構想해 두어야 할 것이다.

(2) 또한가지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主要要因은 國際環境이 統一 韓國의 外交行態에 대해서 制約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韓國은 적어도 周邊四強中 어느나라에 대해서도 敵對的 存在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統一韓國이 中立的 立場을 志向해야 함을 意味하는 것 같다.

統一韓國의 國際的 中立化가 前提되지 않는 統一方案이나 平和構想은 周邊四強의 支持를 期待할 수 없을 것이며 四強의 支持를 받지 못하는 統一方案(이나 平和構想)은 實現可能性이 極히 적을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볼때 中立化統一論을 無條件 封鎖하는 것도 再考해야 할 일인 것 같다. 現在의 條件으로 보아 短時日내에

實現될 可能性은 없으나 長期的으로는 「考慮될 수 있는 代案」으로 取扱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이와 關聯하여 韓半島를 「國際的 緩衝地帶」(an international buffer zone)로 만들자는 案도 하나의 長期的 代案으로 考慮될 수 있을 것이다. 韓半島를 非核地帶化하자는 提案도 마찬가지이다.

統一은 長期間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必然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政策代案이든지 그것이 當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서 完全히 排斥해 버리는 것은 뒷날의 政策選擇의 自由를 위해서 賢明치 못할 것이다.』

### 3. 休戰協定 代替問題

北韓이 유엔을 舞臺로 하거나 美國을 對象으로 하여 유엔軍司令部의 解体와 駐韓外軍의 撤收를 目標로 한참 偽裝平和攻勢를 取할 무렵 國內學界에서는 休戰協定 代替問題가 深刻히 論議되었는데 그 代表的 實例를 들어 본다. (18)

『萬一 유엔軍司令部가 解体될 경우 具體적으로 提起되는 法的問題는 다음과 같다.

①休戰協定の 効力이 喪失될 可能性이 있다. 傳統的 國際法理論에 의하면 協定當事者의 一方이 消滅하면 同協定이 無効化된다는 見解가 成立할 수 있다. ②유엔이 存続하는 限 署名當事者가 消滅해도 協定은 繼續 有効하다는 見解도 있다. ③그밖에 協定自体는

有効해도 協定管理者의 消滅로 事實上 死文化된다는 見解도 있다.

다음으로 提起되는 法的問題는 南北韓의 管轄權 乃至 領土範圍가 不確定狀態에 빠질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는 것이다. 休戰以後 軍事分界線이 南北韓管轄地域 分割線으로 合意를 보았으나 萬一 유엔軍이 無條件 撤収하고 休戰協定の 地位가 現實的 基礎위에서 明確히 規定되지 않는다면 現在의 南北韓管轄地域은 實力에 의한 掌握地域일뿐 아무런 法方根拠가 없어지기 때문에 南北韓間에 領土權紛爭이 發生한 可能性이 생긴다. 그러므로 유엔軍司令部의 解体 및 유엔軍의 撤収에 先行하여 休戰協定の 繼承에 관한 明確한 法的措置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南北韓의 管轄地域範圍도 領土權概念에 符合하도록 規定되어야 한다.

法的側面에 이어 유엔軍司令部 解体에 따라 提起될 重要問題는 韓國의 安保環境이다. 유엔軍이 一方的으로 撤収할 境遇 韓半島의 軍事的 均衡이 破壞되어 只今까지 戰略上 海空軍力을 유엔軍에 依存해 왔던 韓國의 安保體制는 重大한 威脅을 받게되고 萬一 韓半島 軍事情勢가 惡化될 경우에도 安保理事會의 現狀況에 비추어 유엔軍의 再介入이 現實적으로 困難해질 可能性이 濃厚하다. 그리고 軍事停戰委員會와 中立國監視委員國의 解体에 따라 休戰監視機能이 마비될 것이다. 한편 美國의 極東軍事戰略面에서 考察하면 美國이 對韓密着防禦體制를 維持하는데 困難을 당하고 日本政府의 유엔平和維持活動支援이라는 名分이 弱化되기 때문에 美國의 日本基地 使用도 制約받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 対応策으로는 現段階에 있어서는 유엔軍司令部 解体에 反對하는 立場을 固守하여야 하며 萬一 유엔軍司令部 解体案이 유엔總會에서 通過된 경우라 할지라도 安保理事會에서의 友邦의 拒否權行使를 尊重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엔軍이 窮極的으로는 撤收하여야 한다는 點을 감안하여 合理的 撤軍基盤을 造成하는 對策의 講究가 要望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유엔軍司令部는 解体하되 韓美相互防衛條約에 立脚한 美軍의 韓半島繼續駐屯을 考慮해야 한다. 駐韓美軍은 유엔軍이자 美軍이라는 二重身分을 갖고 있는데 유엔軍司令部가 解体되어도 韓美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따라 美軍身分으로 繼續駐屯할 수 있다는 法理論이 成立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軍司令部가 解体될 경우 駐日美軍과 基地가 美日安保條約의 「事前協議條項」의 適用下에 韓半島의 平和維持에 寄與할 수 있는 可能性을 摸索해야 한다.

그 외에도 韓半島問題에 관하여 유엔과 關聯性을 維持해 나갈 것을 考慮해야 한다. 유엔은 1950年 韓國戰爭이 勃發되었을 때 부터 韓半島의 平和維持에 直接的 關聯性을 維持하고 韓國의 安全保障에 責任을 맡아 왔다. 따라서 유엔軍司令部가 無條件 解体될 경우 유엔과 韓半島平和 및 韓國安保와의 關聯性이 斷絶된다. 뿐만 아니라 萬一 南北韓平和協定 乃至 一般關係協定이 締結될 경우 이 에 대한 保障問題가 提起된다. 一般的으로 國際的 保障에는 二個의 類型이 있다. 그 하나는 關係地域의 有關強大國에 의한 保障이다. 1954年 「제네바」에서 調印된 印支平和協定은 當時의 關

聯 9 個국이 國際적으로 保障하였고 1973 年 「파리」에서 調印된 越南平和協定은 關聯 12 個국이 國際적으로 保障하였고 1972 年에 締結된 東西独基本條約은 美·蘇·英·仏의 四大強국이 保障하고 있다. 또 하나는 유엔安保理事會에 의한 保障이다.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은 休戰協定 第 4 條 60 項 規定에 따라 關聯強大國에 의하여 國際적으로 保障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54 年의 「제네바」會談에서 強大國間에 意見이 不一致하였으므로 實現되지 못하였다. 現實적으로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은 關聯強大國間에 合意를 보아야만 圓滿히 保障될 수 있는 것인데 根源的 保障措置에 관하여 關聯強大國間에 合意를 보기란 容易한 일인 아니며 設或 過渡的 保障措置로서 駐韓美軍의 繼續 駐屯에 관해 強大國間에 默示的 合意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四大國保障의 公式文書 속에 包含시키기는 困難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軍司令部를 解体하는 마당에서 유엔에 대해 유엔特別委員會의 設置等 韓半島平和維持에 관한 새로운 負擔을 賦与하기는 不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軍司令部가 解体될 경우 中立國監視委員會의 機能도 마비됨으로 유엔總會는 安保理事會에 中立國監視委員會를 管掌하는 權能을 賦与하는 새 決議案을 採択하여 安保理事會가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도록 措置하는 일은 考慮해 볼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는 方便으로서 南北韓이 同時에 유엔에 加入하여 유엔憲章秩序속에 編入되므로써 萬一 紛爭이 發生하는 경우 유엔憲章에 따라 韓半島의 紛爭解決과 平和回復을 保

障받는다는 것도 效果的일 것이다.』

#### 4. 南北韓 軍縮問題

1976年當時의 國內外狀況속에서 南北韓軍縮問題에 관한 包括的인 基本構想이 國內學者에 의해 提示된 바 있는데 그要點은 다음과 같다. (19)

##### (1) 南北韓軍縮協商의 必要性和 留意事項

將次 南北韓間에 基本關係條約, 平和協定 또는 韓半島의 戰爭狀態 終結을 위하여 그밖의 어떤 制度化措置가 마련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軍備協商이 南北韓間의 軍事的 安定基調를 다지는 共同課業으로서 一次的으로 提起될 것이다. 事實 政治的·軍事的 理由때문에 南北韓間의 軍縮은 雙方에 共通된 必要성을 안고 있다.

對內的 必要성은 主로 經濟的·軍事的 理由때문이며 對外的 必要성은 軍援의 制約, 軍事財政能力의 非獨立性, 對韓半島戰略上에서 오는 強大國의 要請등에 緣由한다. 이 경우 南北韓軍備協商上의 主要「잇슈」로는 計算上의 基準設定이 第一 容易하다고 볼수 있는 「兵力減縮」問題가 가장 優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南北韓軍備協商에 臨하는 마당에 있어 한가지 留意할 點은 韓半島의 安全과 平和維持에 있어 「先保障·後軍縮」의 原則을 貫徹한다는 基本政策方向을 定立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先保障」이란 政治的, 戰略的 意味에서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에 대한

四大國의 保障을 爭取하는데 力點을 두는 일이고 「後軍縮」이란 이와 같은 條件의 成熟度에 基礎하여 南北韓間의 軍事安定을 위한 政治·經濟·戰略上의 技術的, 實務的 問題解決의 方向을 摸索해 나가는 일이다.

南北韓軍縮을 위한 方法으로는 南北韓間의 交涉, 妥協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雙務的 合意」의 方法과 各己의 獨特한 實情아래 自己 必要에 따라 軍縮하는 「一方的 獨自裁量」의 方法이 있다.

## (2) 南北軍縮協商時의 問題點

相互均衡兵力減縮交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南北韓軍縮協商을 통해 合理的으로 定立, 處理되어야 할 一般的 考慮事項과 戰略的 考慮事項은 簡單하지가 않다. 그 問題點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國軍과 人民軍의 組織·編制樣式이 根本적으로 相異하기 때문에 兵力上의 調和基準을 設定하기가 至極히 困難하다는 것.

② 韓國의 美國式 武器體系와 北韓의 中·蘇式 (基本的으로는 蘇聯式) 武器體系間의 不一致때문에 이들間의 均衡基準을 設定하는 것이 簡單치 않다는 것.

③ 軍隊의 下部構造 特히 政治思想을 取扱하는 黨軍性格에 있어 國軍과 人民軍사이의 異質性이 엄청나다는 것.

④ 戰略概念과 軍事敎理가 相異하다는 것

⑤ 協商·妥協·合意過程이 長期化될 可能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

⑥戰術戰法이나 訓練教育方法도 相異하다는 것

⑦國防豫算編成上的 特徵은 다르다는 것

⑧그밖에도 平和維持 相互監視機構·查察方法·軍需産業 등에 관한 問題가 있다는 것

### (3)南北韓軍縮協商에의 接近方法

#### 가. 軍事的 接近方法

①南北韓間의 長期的 軍事安定上 均衡兵力維持의 政治的 必要性이 大前提되어야 한다.

②裝備및 武器體系의 「均衡的 現狀凍結」이 貫徹되어야 한다.

③防衛負擔(軍事財政)을 通減할 수 있는 相互的 方法이 摸索되어야 한다.

④共同查察 및 合同監視制에 관하여 合意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兵力減縮上의 均衡基準에 관하여 合意를 보아야 한다. 이 경우 總人口對兵力構成比를 감안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現在 世界 85 個의 總兵力水準은 平均하여 自國總人口의 約1%程度인데 이는 將次 南北韓間의 兵力減縮交渉過程에서 基盤을 設定하는데 重要的 參考資料로 삼을 수 있다. 北韓의 경우는 總人口對兵力構成比가 約3%인데 韓國은 約2%이다. 이를 各 1%線으로 줄인다면 南北韓의 均衡兵力數는 自動的으로 計算된다.

#### 나. 政治的 接近方法

南北韓双方은 彼此의 軍事力이 서로의 政治的 安全保障의 担保임을 諒解하여 無限定한 競争的 對決姿勢를 止揚하고 그代身 「互惠的 安保概念」을 導入하는데 共同努力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要求된다.

①實質的 緊張緩和를 위해 軍縮協商의 巨視的·長期的 方向을 設定한다.

②兵力均衡策 摸索에 있어 可及的이면 「一方的 独自裁量」原則을 서로 尊重해 줄수 있는 方案을 創出할 것이 바람직하다.

③政治的 接近方法은 軍事的 接近方法 보다 훨씬 伸縮的일수 있는 餘裕가 있음을 감안하여 兵力水準·軍事基地·兵力移動·監視 및 查察·軍事演習·軍事代表相互交流·軍事科學技術情報交換등에 걸쳐 巨視的 立場에서 伸縮性を 살려 나가는 指針을 定立한다.

#### 다. 制度·機構上의 接近方法

이 接近方法은 軍縮實現의 軌道役割을 하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雙務協定の 締結이나 地域安保會議體의 構成 乃至는 集團安保機構의 創設을 통한 것이라 할수 있는데 이 方法을 取하는 경우에는 關係強大國에게 實質的인 協定遵守 및 平和維持를 保障하는 共同監視責任을 賦課함으로써 軍事安定·均衡維持의 實效를 見출 수 있을 것이다.

이 接近方法은 또한 雙方間의 意見膠着을 打開해 줄수 있는 「차널」로서 機能할 수 있으며 特히 軍備協商에 있어 最大難關이

되는 것이 常例인 「相互監視・共同査察」의 機能을 現實적으로 擴大할 수 있다는 것이 特徵이다.

要컨대 強大國에 의한 共同保障이 없는 現今의 群小國間의 軍備協定은 現實적으로 無意味하다. 그리고 將次 強大國들이 軍備의 相互規制를 위한 條件이라 할수 있는 「相互監視・共同査察」措置를 取하는데 失敗한다면 世界는 다시 새로운 軍備競争 및 軍事불력形成의 修羅場이 될 潛在要因을 充分히 품고 있다. 그런點에 비추어 南北韓間의 軍備協商問題는 問題 그 自体로 보면 軍事的 性格을 더우고 있으나 問題解決의 關鍵은 政治的 方法에 의해 處理한다는 現實的 問題把握에 있다고 할만 하다. 그러기 때문에 世界와 韓半島의 平和는 樂觀과 悲觀의 半々展望속에 있다 할 것이다.

##### 5. 南北韓一般關係 設定問題

앞서 말한 國內學者는 더 나아가서 76년에 發刊된 政府用役研究論文에서 「韓半島平和定着의 制度化 方案」을 論하는 가운데 南北韓一般關係設定에 관하여 注目할 만한 構想을 開陳하였다. (20)

즉 그는 『最近에 紛爭地域에 平和가 定着되는 몇個의 國際秩序가 形成되었다. 東西獨基本條約의 締結, 越南平和協定の 調印 및 「라오스」平和協定の 調印에 따르는 平和体制의 樹立이 그것이다. 이들 3個의 平和秩序의 定着은 各己 獨特한 背景下에 이루어졌지만 다같이 韓半島의 平和定着方案 研究에 寄與하는바 클 것이다』라 하여 上記한 3個의 條約 및 協定の 內容을 比較・評價한 다음 南

北韓平和定着的 基本方向과 南北韓一般關係協定에 包含되어야 할 規定內容을 試驗的으로 提示하였는데 그 要點은 다음과 같다.

## (2) 韓半島平和定着的 基本方向

①北韓의 軍事問題解決 爲主의 平和協定締結方式을 積極 排除하고 南北韓關係를 改善하는 包括的인 一般關係(基本關係)를 設定하는 方向으로 誘導하여야 한다.

②따라서 北韓이 主張하는 軍事事項에 관한 規定을 一般關係設定의 한 部分으로 極小化시켜 韓半島 軍事安定化를 위한 原則을 宣言하는 線에서 그치고 主로 統一問題 南北關係改善능에 관해 包括的 規定을 하도록 한다.

③外面的으로는 休戰協定 內容을 繼承하고 7.4 共同聲明을 發展 具體化시키는 形式을 取해야 하나 內面的으로는 6.23 宣言의 精神과 論理를 具現시켜야 한다.

④統一意志를 宣揚하여 統一拋棄印象을 払拭해야 한다.

⑤南北韓體制 相互不干涉原則을 強力히 反映시켜야 한다.

## (3) 南北韓一般關係協定

以上の 基本原則에 立脚하여 南北韓一般關係協定은 그 序文에서 7.4 共同聲明의 繼承, 休戰協定의 有効등을 밝히고 第一部の 統一条項에서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統一原則을 明示함과 아울러 南北韓間에 民族同質性을 回復한 바탕위에서 窮極的으로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總選舉를 實施할 것을 規定한다. 다음 第二部の

南北關係條項에서 ①統一政府樹立時까지 暫定的으로 南北韓間的 体制共存을 認定하여 相互不干渉 및 유엔同時加入등을 規定하고 ②相互安保事項不干渉(不可侵)의 原則을 明示하고 ③諸般分野에 걸친 南北韓交流를 規定하고 ④南北調節委員會를 政府級機構로 만들고 分科委員會 및 事務局을 設置할 것을 規定한다. 끝으로 第三部の 平和維持條項에서 ①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現狀維持 ②現存하는 軍事停戰委員會를 南北調節委員會 軍事分科委員會로 吸收하고 軍縮을 實施한다는 基本原則 ③中立國監視委員團을 유엔安保理事會 管轄下에 두어 現在 無力狀態에 있는 同委員團의 機能을 回復·強化 한다는 原則 및 ④韓半島의 非核化原則등을 規定한다 ⑤그밖에 外軍撤収問題에 관해서는 相互安保事項 不干渉原則을 내세워 이 問題 自体를 默殺할 수 있으나 北韓이 이 問題에 관한 言質을 頑強히 要求할 경우에는 外國軍의 長期에 걸친 段階的 撤収의 原則을 諒解할 수도 있다.

## V. 南北韓 및 周邉四大國間의 政策調整

### 1. 韓半島 環境狀況의 變化

第二局面末期인 76年當時의 國際情勢는 「키신저」長官의 緊張緩和 및 循環的 勢力均衡政策, 「브레즈네프」의 平和共存 및 勢力膨脹 同時追求政策 그리고 毛沢東의 「三世界理論」(three-world theory)에 立脚한 長期制限戰爭戰略사이의 對決로 一種의 現代版 「三國誌」現象을 나타내어 緊張緩和나 緊張再高潮나 의 岐路에 선 感을 주더니 76年 末부터 77年 初에 걸쳐 美國에 「카터」行政府가 登場하고 中共에 華國峰體制가 出現하고 日本에서 福田內閣이 出帆하고 蘇聯에서 새 憲法아래 「브레즈네프」體制가 強化되는등 韓半島周邉 四大國에서 모두 權力構造가 變動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各國의 外交政策과 軍事戰略이 再定立되고 이들 諸國間의 勢力關係가 變動될 可能性이 생겼으므로 앞으로 東北亞에 어떠한 國際體制가 形成될 것인지에 관해 여러가지 臆測이 나타났다. 그리고 南北韓과 周邉四大國間에는 여러가지 轉換期的 陣痛과 幕後交渉을 통한 利害調整過程을 거쳐 78年頃에 이르러서야 韓半島問題解決에 관한 實質的 輪廓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展望됨에 이르렀다. (21)

## 2. 韓美間의 새로운 戰略協調態勢

實際의 事態進展에 있어서는 우선 韓美兩國부터 그 盟邦關係와 政策路線을 調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카터」大統領은 選舉期間中 韓半島緊張緩和措置의 一環으로 駐韓美軍의 撤収를 公約한 바 있는데 朴正熙大統領은 77年1月12日 『北韓은 南北韓不可侵協定 締結提議를 받아들이다. 萬約 이 協定이 正式 締結된 然後에는 駐韓美軍撤収에 反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駐韓美軍撤収計劃과 關聯된 우리나라 政府의 最初의 政策發言일 뿐 아니라 北韓과 美國을 同時에 겨냥하였다는 點에서 重要하다. 즉 北韓에게는 武力共產化統一의 妄想과 對美平和協定交渉의 策動을 버리라는 것을, 그리고 美國에게는 美軍撤収의 先行條件이 充足될 때 까지 對韓防衛公約을 誠實히 履行해야 한다는 것을 間接的 表現으로 要求하였던 것이다. 그後 韓美協議段階에 들어가서 朴大統領은 「先補完·後撤軍」의 原則에 따라 美國이 撤軍에 앞서 韓國의 自主國防力 強化를 위해 積極支援해 줄 것을 要求하였다. (22)

또한 이 問題에 관한 韓美日三國의 學者나 專門家들의 公約數的 見解도 美·蘇 및 中共間의 「데탕트」가 實質적으로 進展되고 南北韓間의 平和共存關係가 制度化되지 않는限 駐韓美軍의 段階的 撤収를 一方的으로 서둘러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韓國이 自主國防態勢를 完壁化하고 美·蘇·中共·日本 및 南北韓이 安定된 勢力均衡을 이룬 가운데 東北亞平和體制를 構築한다는 先行條件이 갖추어

질때까지는 駐韓美軍撤収에 慎重을 期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터」行政府는 發足後 재빨리 駐韓美軍撤収問題를 다루어 77年3月9日 朴東鎭外務部長官과 美國首腦層사이에 있었던 第1次 協議時에는 美國側이 撤軍計劃을 一方的으로 通告하는 듯한 印象을 주었다. 그리고 美國政府는 3月18日을 期해 北韓등 未修交國에 대한 美國人의 旅行制限을 解除하고 6月末에는 「홀부르크」美國務次官補가 美國은 中共·北韓·「베트남」등 亞細亞共產國家에 대한 封鎖政策을 終結한다고 公式發表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美國은 「카터」大統領의 世界政策宣言, 「벤스」國務長官의 亞細亞政策闡明등을 거쳐 美國의 새로운 世界平和秩序概念 乃至 「데탕트」追求方法 그리고 새로운 世界政策과 世界戰略의 脈絡속에서 對韓半島政策을 漸次 再定立해 나갔다. 特히 駐韓美地上軍 減縮問題에 관하여 韓美兩國間에 實務協議가 進行中이던 6月29日 「벤스」美國務長官은 「카터」行政府 登場後 처음으로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을 開陳한 가운데서 美國이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保障할 永久的인 體制의 確立을 위하여 當事者會談을 推進할 것이며 (但 韓半島의 將來에 관한 어떠한 協商에도 반드시 韓國이 參與해야 한다) 北韓의 同盟國들이 韓國과 關係改善措置를 取한다면 美國으로서도 北韓과 關係를 改善할 態勢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宣言하여 「카터」行政府도 「키신저」構想을 繼承·發展시키려 하고 있음을 밝혔다. (23)

그리고 7 月の 第 10 次 韓美安保協議會會議에서는 駐韓美地上軍의 段階的 撤収에 따르는 軍事的 補完措置로서 ① 韓國軍現代化計劃 및 戰力增強計劃 支援과 韓國의 防衛産業 育成 ② 約 8 億弗에 達하는 駐韓美軍裝備를 無償으로 韓國에 引渡 ③ 對外軍事販買借款의 繼續 提供 ④ 韓國軍과의 合同軍事訓練의 擴大 ⑤ 韓美聯合軍司令部의 設置와 유엔軍司令部의 繼續 機能發揮등에 合意하였다. 그리고 外交的 補完措置로서는 ① 美國이 對韓防衛公約 履行決意를 再闡明한다. ② 韓半島平和定着을 위한 四者會議을 繼續 推進한다. ③ 南北對話와 南北韓不可侵協定 締結을 위해 美國이 中共과 蘇聯에 대해 影響力을 行使한다는 것등에 合意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韓半島問題 解決 乃至 東北亞平和體制 構築에 관한 戰略構想이 다시금 一致되는 가운데 政治的·外交的 協調態勢를 더욱 굳히게된 韓美兩國은 今 78 年 7 月の 第 11 次 韓美安保協議會會議에서 韓國安保 및 韓半島平和定着을 위한 보다 細部的인 協力措置에 관해 合意를 보았는데 其中 特히 注目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① 駐韓美軍撤収計劃 自體에는 變動이 없으나 北韓의 軍事動向, 東北亞全般情勢등 韓半島의 軍事均衡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態變化가 있을 경우 美國은 撤軍計劃을 調整한다. ② 美國은 韓國에 대한 武力攻擊이 있을 때 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라 即刻的이고 效果的인 支援을 提供하겠다는 決意가 繼續 確固하고 強力하며 韓國이 美國의 核雨傘下에 있고 앞으로도 繼續

그렇것 입을 再確認하였다. ③韓美兩國은 韓國防衛의 作戰效率 增進을 위해 78年中에 韓美聯合軍司令部를 設置하고 이와 同時에 韓美軍事委員會를 設置하여 韓美聯合防衛體制를 強化한다는데 合意 하였다. 이는 韓國軍이 作戰指揮權을 全面 引受하기 위한 過渡 措置라는 点에서 意義가 크다. ④韓美聯合軍司令部創設에도 不拘 하고 現韓國休戰協定에 대한 代案이 마련되지 않는限 유엔軍司令部가 平和維持機構로서 繼續 機能을 遂行해 나갈 것임을 確認하였는데 이는 現休戰體制를 維持해 나가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⑤北韓에 대하여 南北對話 再開를 促求함과 아울러 美國은 韓國의 參與없이 北韓과 韓半島의 將來에 관하여 어떠한 交渉도 하지 않을 것임을 再確認하였다. (24)

### 3. 美·北韓接觸과 三者會談案

北韓은 「카터」行政府 登場以後 對美接觸努力에 더욱 拍車를 加해 왔다. 特히 「부토」孟加拉대시大統領, 「티토」유고대統領 및 「차우세스쿠」루마니아대統領등 非同盟中立國의 旗手들을 내세워 그들의 立場을 美國政府에 傳達시켜 왔다. 甚至於 金日成은 外國記者와의 會見을 통해 「포드」行政府와 「카터」行政府를 意識적으로 區別하면서 까지 後者에 대한 好意的期待를 表明하는 外交的 제스처를 보였다. 그리하여 幕後接觸이 相當히 깊숙히 進行되고 美·北韓接近의 霧困氣가 成熟된 狀況속에서 韓·美·北

韓間의 三者會談提議가 나왔는데 이는 美·北韓間의 直接協商을 固執해 온 北韓側 要求와 南北對話 또는 四者會談을 主張해 온 韓美 두나라의 要求를 折衷한 것이 特色이다. 一部에서는 今 78年 3月7日의 「카터」·「티토」會談때 「티토」가 美·北韓間 直接協商등 金日成의 主張을 傳達하였으나 「카터」大統領의 反對에 부딪혔으므로 次善策으로 南北韓 및 美國사이의 三者會談을 提議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定說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또다른 消息通들은 美國이 三者會談이라는 表現은 쓰지 않았으나 「韓國이 參與하면 北韓과의 接觸이 可能하다」는 것을 示唆해온 點으로 비추어 보아 적어도 이 問題에 관한 「힌트」는 던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既往의 四者會談 또는 南北對話案과 이번의 三者會談案과는 그 狀況的 背景을 달리하고 있으나 美國 外交政策 決定者들의 認識에 있어서는 이 두 系列의 提議사이 에 두가지 點에서 繼續性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는 韓半島問題 解決과 關聯하여 美國이 外交的 「이니셔티브」를 取하는 것이 不可避하고 重要하다는 것이 고 또 하나는 北韓의 閉鎖적이고 頑固한 態度的 變化를 誘導해보려 熱望하고 있다는 것이다. 事實 美國이 「카터」行政府 段階에 와 서 從前의 對北韓 敵對政策을 修正하고 三者會談을 통해 北韓과 協商하려고 一時나마 나서게 되었던 要因은 다음과 같이 集約된다. 첫째로 駐韓美地上軍 撤収에 대한 政治的·外交的 補完措置의 一環으로 美國과 北韓의 關係를 改善함으로써 北韓의 南侵을 預防하고

韓半島周邊情勢를 美國에게도 有利한 形態로 安定시키자는 것이다. 둘째로 美國의 보다 幅넓은 世界政策의 一環으로 美國이 아직 國交를 갖고 있지 않은 모든 나라와 關係를 設定함으로써 이들 國家와 蘇聯과의 關係를 斷絶시키거나 緩和시켜 보자는 것, 特히 北韓의 蘇聯으로의 密着을 막거나, 蘇聯의 韓半島에 대한 影響력을 줄여 보자는 것이다.

한편 北韓이 對美平和攻勢를 繼續해 온 背景으로는 韓國經濟의 迅速한 成長과 韓國自主國防力의 增強, 中·蘇의 對北韓 經濟援助 退潮와 極度로 惡化된 北韓經濟事情, 그리고 現美國行政府의 對北韓 關係改善政策과 過渡期的 韓美關係調整樣相등에 대한 認識을 들수 있다. 그리하여 具體的으로는 ①韓美兩國을 離間시켜 美國의 對韓 支援을 弱화시킨다. ②駐韓美軍撤収를 促進시킨다. ③韓國軍 現代化計劃의 推進을 鈍化시킨다. ④韓半島問題에 있어서의 代表的 存在性을 誇示하여 韓國國民의 心理的 挫折感을 觸弄시킨다. ⑤中·蘇間에서 現狀을 維持하면서 美國과의 關係改善으로 經濟的 難關打開의 契機를 마련한다는 것등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三者會談이 開催된다고 假定할때 우리나라에게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提起된다. 첫째로 美國으로서는 韓國을 北韓의 主 相對로 내세워 第三의 超然한 仲裁者의 立場에 서기가 어렵게 되어 우선 美國이 北韓을 相對로 어떤 協商의 結論을 導出한 다음 이를 韓國에게 내려막으려 할 것이므로 韓國은 會談過程에서 副

次的 地位로 밀려나 国家的 主體性和 正統性에 損傷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北韓은 韓半島의 軍事的 均衡問題를 美国과 다루어 美·北韓間에 平和協定을 締結한 然後 南北韓間의 交流와 窮極的 統一을 위한 政治問題는 南北韓間의 會談에 맡기자는 越南平和協商式 二重構造的 構想을 안고 있으므로 北韓의 計略에 빠질 念慮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三次會談을 통한 美·北韓關係의 進展은 日本을 爲始한 많은 西方國家들의 對北韓接觸을 誘發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 우리 大韓民國의 對應策으로는 會談에 參與할 것인가 與否와 參與할 경우 어떤 條件下에 參與할 것이며 會談의 議題範圍를 어떻게 定할 것인가가 焦點이 된다. 三者會談은 參與할 경우나 參與치 않을 경우나 모두 得失을 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三者會談提議에 대해 처음에 反對意思를 表明하였다가 後에 이르러서는 事態의 進展에 따라 對處한다는 慎重한 姿勢로 바뀌었다. (25) 그러나 78年 5月에 華國鋒이 北韓을 訪問하였을 때 中共은 大韓民國을 認定치 않으며 北韓의 統一路線을 支持한다고 強硬發言하여 中共과 北韓이 다같이 三者會談을 間接적으로 拒否하였으므로 그 實現可能性은 稀薄하다. 하지만 南北韓間의 二者會談이든 南北韓 및 美国間의 三者會談이든 또는 南北韓과 美·中共間의 四者會談이든 南北韓을 한 會談테이블로 끌어내리는 基本構想만은 살아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識者 가운데는 美国·日本이나 東歐國家 甚至於는 蘇聯·中共까지도 이제는 韓半島의 平和保障을

위해 어떤 方式으로든 当事者間에 政策을 調整할 必要만은 느끼기 始作한 듯 하며 이러한 國際的 趨勢아래 우리나라로서도 좀더 彈力性있게 能動的으로 対処해 나갈것이 바람직하다고 論하는 사람이 나왔다.

#### 4. 새로운 變數要因의 抬頭

또한 最近에 이르러 國內學者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平和統一三大原則을 補強할 것을 主張하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平和戰略과 關聯하여 注目되는 部分을 摘記해 본다. (26) 그는『이제 韓半島周邊의 國際情勢는 韓半島統一問題를 「韓國化」시켜 놓고 있다. 즉 統一의 一次的 責任을 韓民族에게 넘겨 주고 韓半島內에서 發生하는 事態의 對外的 波及效果만을 強大國이 關与하겠다는 樣相으로 事情이 달라져 가고 있다. 또한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은 統一과 함께 平和를 追求하고 있는 것이지 平和가 統一의 前提條件에 不過한 次善의 目標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平和統一三大原則은 그 關係를 分明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統一보다는 平和를 願하고 統一이 어려우면 우선 平和만이라도 追求해야 한다는 論理로 發展하여 「永久分斷」을 바라고 있다는 誤解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指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點등을 提言하였다. ①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을 具體적으로 確定할 것 ② 우리의 對外政策基調로서 平和共存原則을 宣言해 둘 것. 이는 우리의 主體的 立場을 全世

계에 公認시키고 우리의 統一努力에 대한 外國의 干涉을 막는데도 一助가 될 것이다. ③우리의 統一政策에 관한 限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恒常 確保하여 어떠한 強大國의 介入도 排除할 것 ④ 南北韓不可侵協定, 相互軍縮, 各種 非政治的 交流, 共榮邦制(南北韓과 東北亞 몇나라가 參與), 南北 政治協商 등을 具體的으로 成案하여 北韓이 応해 올때 까지 繼續 誠意있게 提示해 나갈 것. 以上과 같은 論議에 대하여 一部에 批理論이 있었으나 그런대로 考慮價值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實際에 있어 어떠한 視角과 立場과 前提的 準拠에서 情勢判斷을 하고 政策構想을 세우고 이를 具現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은 決코 容易하지 않다. 事實 韓半島平和・統一問題에는 많은 變數要因이 内外로 얽히고 있어 그 將來展望은 如前히 不透明하다. 昨속에 와서 細部的으로는 四強이 循環的 相互依存關係로 들어가 韓半島를 둘러싸서 六者間에 平衡三角關係를 形成함으로써 交叉壓力과 消極的 環流(negative feedback)의 機能을 發揮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勢力關係의 混調와 均衡의 破壞로 韓半島問題解決에 逆機能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있어 中蘇紛爭은 貢獻的 要因이 될 것인가 阻害的 要因이 될 것인가.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接觸과 對蘇・對中共關係는 觸媒的 役割을 할 것인가 離反的 役割을 할 것인가, 第三世界는 韓半島問題解決에 어떠한 態度를 取할 것인가. 그리고 南北韓間의 国力差의 增大가 南北關係를 東西獨式 共存

方向으로 引導할 것인가 또는 北韓의 自暴的 冒險을 誘致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北韓은 그 政策路線을 柔軟化하여 南北韓關係를 改善하려 나올 것인가 또는 끝내 힘의 政策, 革命戰略을 固執하여 南北韓關係를 極限狀況으로 물고 가고 周辺四強에 대해서도 그들간의 均衡破壞因子로 作用할 것인가 하는 것등이 우리의 注目を 끌고 있다.

더욱이 今 78 年에 와서는 다시금 激動하는 國際情勢 가운데 다음과 같은 諸事實이 韓半島平和定着課業 및 韓半島問題 解決에 影響을 미치거나 示唆을 던져 주는 새로운 要因으로 登場하고 있다.

(1) 「데탕트」를 逆利用하여 蘇聯이 軍備를 擴張하고 世界到處에서 勢力圈을 擴大해 오며 따라 美蘇關係 全般이 惡化되었으며 及其也는 美國이 中共을 自己便으로 끌어넣어 美·蘇·中共 三極關係가 美·中共 對 蘇聯의 對立關係로 轉換하였다. 이에 따라 流動하게 된 世界는 冷戰期와 「데탕트」期에 이어 戰後 「第三의 時期」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새 時期가 새로운 國際政治의 準則에 따라 世界秩序를 再編成하는 「第二次데탕트摸索期」로 安着될 것인지 또는 世界的 規模로 冷酷한 權力政治를 復活시키는 「第二次 冷戰期」로 逆行할 것인지가 아직 分明치 않은 岐路에 서 있다. (27)

(2) 特히 蘇聯의 亞細亞太平洋地域에 대한 軍事的 威脅의 增

大는 日本과 中共을 刺戟하여 日本의 軍備增強을 促進시키고 78年 8月 12日 日·中共平和友好條約을 締結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中共으로 하여금 美·日 및 西歐와 中共을 連結하는 反蘇國際統一戰線 形成에 拍車를 加하게 하였다. 그리고 中共은 明79年 4月에 中蘇友好同盟條約의 廢棄를 宣言할 計劃으로 있다. 그밖에도 中共은 蘇聯의 亞細亞集團安保構想에 對抗하기 위하여 汎亞細亞安保條約의 締結을 提唱하고 나섰다. 美·日의 指導層人士 가운데는 美·日·中共間의 聯合體制 (entente)가 情勢如何에 따라서는 亞細亞版 「나토」 즉 亞細亞地域에서의 反蘇軍事同盟으로 發展할 可能性까지 내다보거나 蘇聯의 膨脹에 對備해서 韓美日結束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또 다른 한편에는 全方位平和外交를 標榜하는 日本이 中·蘇 對立의 渦中에 말려들어가서는 안된 다든지 美國은 對蘇關係를 惡化시키지 말고 長期的 眼目에서 美·蘇·中共間에 三角均衡을 維持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強調하는 사람들도 있다. (28)

(3) 華國鋒이 지난 5月에 北韓을 訪問한 바 있거니와 中共은 日·中共條約 締結後에도 北韓을 自己便으로 끌어 두려고 繼續 애쓰고 있다. 지난 9月 8日에는 北韓의 政權樹立 30周年記念行事에 參席하기 위하여 鄧小平이 平壤을 訪問하고 金日成과 會談하였는데 이에 2日 앞서 北京에서 日本言論人團과 會見한 자리에서 그는 金日成의 統一方案을 支持하면서 韓半島에는 그다지 큰 緊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고 또한 北韓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에는 限界가 있으며 이 보다 注目할것은 蘇聯이 韓國과 接觸하기 始作

事實이라 는등 매우 多目的인 發言을 하였다. 中共으로서는 아무리 美國 및 日本과 緊密히 提携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中共이 韓國에 接近하거나 關係改善을 서두르는 일은 金日成이 그것을 바라지 않은限 試圖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韓·蘇接近 可能性을 내세워 北韓과 蘇聯사이를 離間시키려 한 點이 注目된다, 이로써 南北韓을 둘러싸 韓半島를 舞臺로 中·蘇間에 外交角逐戰이 버려질 可能性이 생겼는데 北韓으로서는 鄧小平의 平壤訪問을 契機로 親中共方向으로 施回하였으나 蘇聯의 影響力을 完全히 排除하기도 힘들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4) 日·中共條約締結後의 一連의 事態發展이 當場에 韓半島問題에 新局面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으나 긴 眼目에서 볼때 中共이 北韓에게 보다 柔軟한 路線을 取하도록 影響力을 行使하게 될 可能性은 있다, 또한편으로는 蘇聯이 三強의 蘇聯牽制政策에 대한 反響으로 北韓을 東北亞에서의 蘇聯前哨基地로 삼기 위해 北韓에 대한 軍事·經濟援助를 強化하여 北韓으로하여금 紛爭을 일으키게 할 危險性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北韓이 昨77年의 第32次 유엔總會에 韓半島問題를 끌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注目할 일이며 今年의 政權樹立記念行事때의 金日成演說內容이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 韓半島平和·統一問題와 關聯하여 從末 美國과의 直接協商에 恒常 붙여 왔던 條件을 이번에는 특히 強調하지 않았다는 事實은 北韓이 벌써 中共의 伸縮外交의 影響을 받게된 것이 아닌가 推測케 하는 面도 있다. (29)

(5) 南北韓의 国力은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大韓民國側의 優勢로 기울러 가고 있는데 78年現在로 韓國이 人口・總兵力・國民總生産面에서 北韓에 앞서고 空軍力에서만 뒤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最近에는 國產「미사일」까지 開發하여 自主國防態勢를 더욱 鞏固히 하고 北韓에 대한 實質的 戰爭抑止力을 갖추게 되었다. (30)

## VI. 總括과 将来展望 (結語)

### 1. 全歷程의 特徵的 樣相

結論的으로 말하면 南北韓의 平和構想과 平和戰略은 다음과 같은 内外 諸變數要因의 複合的 作用을 받아 變轉하고 相互對應하는 가운데 虛々実々の 循環過程을 밟아 왔다. (31)

#### (1) 南·北韓 内部의 實態

- ①各己의 政治的 安定度
- ②各己의 經濟的 成就度
- ③各己의 軍事的 成就度
- ④綜合的 国力比較

#### (2) 國際環境

①國際政治 狀況 (世界的 權力 構造, 유엔內의 勢力分布狀況, 國際政治의 行態的 特徵, 美·蘇·中共 三極關係, 第三世界의 動向등)

②韓半島周邊의 勢力關係 (東北亞國際體制, 美·蘇·中共·日의 對韓半島政策, 南北韓의 國際的 地位, 南北韓과 美·蘇·中共·日과의 關係등)

既往에 南北韓間에는 韓半島平和 및 統一을 위한 政策構想이 相互作用속에 多樣하게 發表되었고 韓國內의 學界에서도 그 밖에 생각할수 있는 모든 方案이 開陳될대로 다 開陳되어 왔다. 그러나 實際의 過程에 있어서는 國際的 環境與件이 아직 成熟되지 않았고

北韓의 基本戰略에 本質的 變化가 없다는 것이 韓國이 提示해 온 統一政策 및 平和構想이 아직 現實化되지 못한 最大의 沮害要因이 되고 있다.

北韓은 70年代 中葉까지만 하여도 「強者の 戰略」에서 韓半島 平和統一問題에 관하여 非合理的이고 非現實的인 攻勢的主張을 되풀이해 왔으나 南北韓의 綜合的 国力에 있어 劣勢에 물리게 된 70年代 中葉以後는 守勢로 轉換하였다. 北韓은 南北韓關係가 南韓이 바라는대로 東西獨關係처럼 될 可能性이 더욱 커진 것을 念慮하게 되었다. 그런데 北韓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韓半島統一을 越南式으로 達成해 보려는 執念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무슨 手段을 써서라도 南北韓共存體制를 指向하는 現在의 大勢를 막아보려고 애써 왔으나 이것마저도 昨今の 客觀的 内外狀況의 變化로 限界에 達한 感이 있다. 이리듯 韓半島平和統一問題에 있어서는 南北韓国力 및 周邊情勢와 關聯하여 時間的 要素가 重要性을 띠워왔다. (32) 이 마당에 있어 南北韓關係는 70年代初期에 冷戰對峙狀態를 脫皮하여 好意的 共存을 指向하다가 南北對話中斷後는 對決的 共存狀態로 後退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環境도 크게 變化하였다. 元來가 南北韓間에 關係改善努力이 始作되고 서로 平和戰略(平和攻勢)을 힘차게 展開하게 된 것은 70年代初 以後 高潮된 東西間의 「데탕트」氣運을 反映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後 75年の 印支事態後 적어도 亞細亞・太平洋地域에서는 四大國間의 「데탕트」氣運이 退潮

하였으며 北韓의 加增되는 威脅앞에 大韓民國으로서는 和戰兩略의 對備策을 強化하지 않을수 없었다.

또한 76 ~ 7 年에 걸쳐 韓半島周辺四大國에서 權力構造가 變動되고 이에 따라 이들 各國의 外交政策과 軍事戰略이 再定立되는 가운데 이들의 對韓半島政策이 달라지기 始作하자 南北韓과 周辺四大國間에도 利害및 關係調整이 進行되었다. 여기에 있어서는 韓美兩國부터 政策路線을 再調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駐韓美軍은 東北亞에서의 軍事均衡을 維持하는데 核心的 要素가 되어 왔는데 美國의 「카터」大統領은 韓半島緊張緩和策의 一環으로서 77 年에 駐韓美地上軍 段階的撤収計劃을 發表하고 78 年부터 實踐에 옮겼다. 美國으로서는 駐韓美軍의 撤収가 北韓의 態度變化를 誘致하여 對話의 場에 나오게 되기를 期待하고 있으나 果然 이것이 韓半島에 緊張을 緩和시키는 要因이 될런지 또는 緊張을 再高潮시킬 要因이 될런지는 現時點에서 判定내릴수 없고 다만 美軍撤収 完了予定年인 1982 年前後의 時點에 가서 現休戰體制의 韓國化가 不可避해 저서 이때 南北對話나 當事者會談의 與件이 成熟될 것으로 展望하는 例이 나왔다.

이 局面에 있어 韓美兩國은 韓半島平和의 制度的 保障에 관한 長期的 비견의 具現을 위해 繼續 外交的 主導權을 掌握해 나가면서도 虛構的 平和構圖만 固執하는 北韓의 頑強한 拒否態度와 그 背後支援勢力인 中共과 蘇聯의 不確實한 反應때문에 現實的으로는 駐韓美地上軍撤収에 따르는 軍事的·外交的 補完措置를 強化

하는등 「힘을 배경으로 한 平和」 다시 말해서 戰爭抑制를 優先視하는 「安保戰略」에 置重하지 않을수 없었다. 韓美兩國이 共同으로 推進하는 平和戰略 즉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亞에 平和體制를 構築한다는 眞實性있는 構想이 成功을 걸우려면 다음과 같은 要件이 充足되어야 하는데 今 78年初 現在의 狀況으로 보아서는 美 地上軍 段階的撤収計劃의 實踐등 若干의 初步的 狀況變化를 除外하고는 그러한 要件이 거의 모두 充足되지 않은채 우리나라의 巨視的인 平和戰略과 平和構想이 原点에서 맴돌고 있다는 感이 든다.

①南北韓關係의 基本類型이 적어도 平和共存型으로 柔軟化됨과 아울러 東北亞의 새로운 地域秩序가운데 놓여진 韓半島의 國際政治的 座標가 定立되지 않으면 안된다.

②周邊四大國間에 亞細亞·太平洋의 規標로 國際關係의 行動基準이 確立되어짐과 아울러 勢力均衡이 安定化되지 않으면 안된다.

③韓半島問題에 관한 六者間의 利害가 全體적으로 統整되어 적어도 어떤 共同利益의 場이 發見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있어 可能하다면 南北韓이 主導的役割을 할 것이 바람직하다.

④國際的인 合意到達에 그치지 말고 이를 規範化·制度化하는데 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된다. (33)

또한 유엔의 次元에서는 第30次總會에 南北韓 雙方의 意思를 담은 相反된 內容의 兩決議案이 通過되면서도 何等의 實効를 걸우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유엔의 政略的 効用은 雙方에게 다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北韓은 77·78年의 第32次 및 第33次總會에

韓半島問題를 上程치 않았으며 韓國으로서도 北韓이 물고 오지 않는 限 不上程戰略을 堅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當分間 韓半島問題는 유엔 테두리밖에 머크르게 될 것으로 予想된다. 南北韓 유엔 同時 加入은 北韓이 反對하고 있고 또 유엔 現況에 비추어 韓國이나 北韓만의 單獨加入이 實現될 可望도 없다.

結局 오늘날 韓半島에서의 戰爭과 平和의 問題, 統一의 問題는 國際政治의 全般的 趨勢나 周邊國家들의 對韓半島政策 또는 유엔과 같은 國際機構에 의해서 一次的인 影響을 받는 것이 아니라 韓國과 北韓사이의 問題로 壓縮되고 있다. 즉 思想과 理念의 對決, 軍事的·外交的 對決은 如前히 持續하면서도 이와 併行해서 兩者가 그間 蓄積해온 成果(国力), 앞으로 實現할 目標능을 두고 優劣을 判가름하려는 韓民族內 兩政治勢力間의 競爭이라는 性格을 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韓半島平和·統一問題의 解決에 있어서는 南北韓이라는 直接當事者間의 自主的 努力이 보다 關鍵的 重要性을 띠우게 될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從來 非協調的 拒否姿勢를 一貫해온 北韓이 心機一轉 民族의良心으로 돌아와 韓半島問題의 實質的 解決에 誠意를 보여 올 것이 根源的으로 緊要하다.

그러나 韓半島의 地政學的 特殊性和 戰略的 重要性에 비추어 韓半島問題가 國際政治的 性格을 完全히 脫皮하거나 周邊強大國들의 直接的·間接的 影響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따라서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에 관한 問題는 一次的으로는 南北韓間의 自主的

解決努力이 進行되어야 하나 同時에 周邊強大國 및 유엔과의 關係이 不可欠하다. 特히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위해서는 國際的 協調와 保障이 絶對로 必要하다. 우선 北韓을 當事者會談에 應하도록 誘導하는데에도 周邊強大國들이 北韓에 影響力을 行使할 것이 必要하다. (34)

## 2. 將來展望과 우리나라의 새 平和構想

그間 周邊強大國間의 和解의 增進과 이들의 南北韓과의 關係改善은 韓半島에서의 戰爭抑止에 도움이 되고 또한 中蘇紛爭과 中·蘇의 對北韓疎遠도 北韓의 戰爭挑發을 抑止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一般原則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既述한 바와 같이 今 78年에 이르러 周邊國家間의 關係와 南北韓과의 關係는 過渡期的 混迷狀態에 빠진 가운데 새로운 挑戰的 狀況을 우리에게 提起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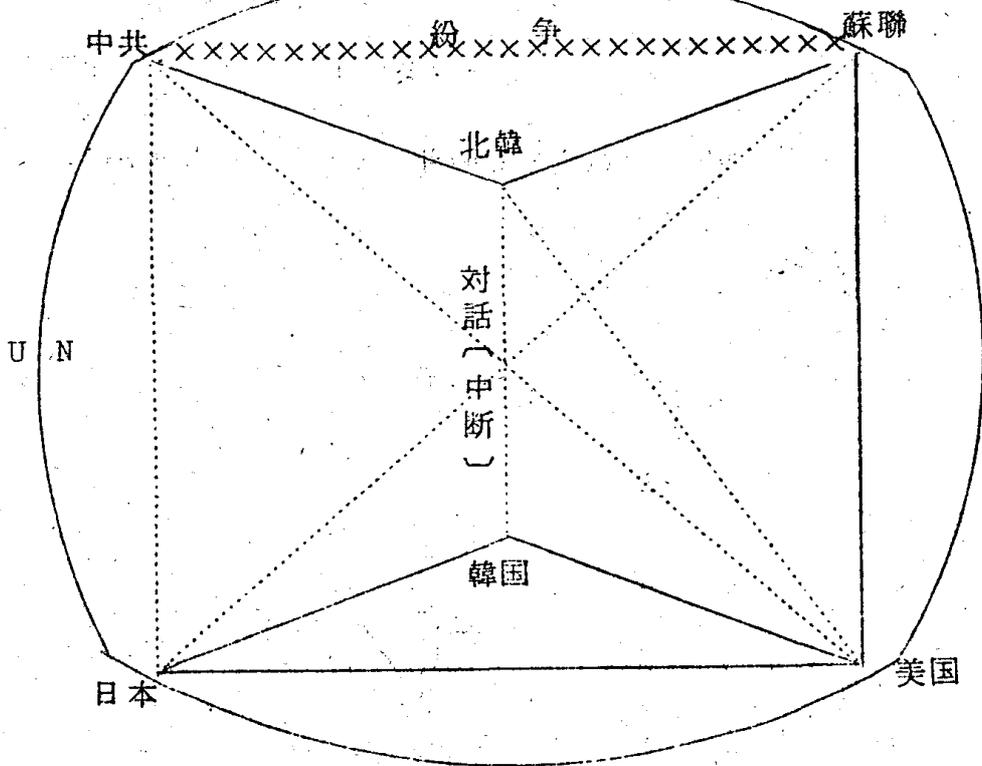
從來 理論的으로는 韓半島周邊 四強國間에 12種의 三角連繫體系를 想定할 수 있고 南北韓과 連結될 때는 30種의 三角關係를 想定할 수 있는데 이들 六者가 四強體制밖의 對應的 三角體制라는 靜態的 勢力均衡의 過渡的 段階를 거쳐 交叉的 平衡三角體制라는 動態的 勢力均衡의 段階로 安定될 것을 東北亞 平和構造의 理想圖로 提示한 學者도 있다. (35) 그러나 現時點에서 볼 때 韓半島周邊 四強間에는 美日安保體制, 日·中共友好關係, 美中共和國交正常化 促進(따라서 美·日

中共三者聯合體제의 成立)이라는 協和的 要因과 中蘇紛爭・美蘇關係 惡化・日蘇關係緊張(따라서 美・日・中共對 蘇聯間의 對立・抗爭의 可能性)이라는 不協和的 要因이 併存하고 있다. 이에다 南北韓까지 添加한 六者間의 勢力關係는 例컨대 ①韓+美+日 對 北韓+中共+蘇라는 從來의 形式的 結合圖式으로 부터 ②韓+美+日+中共 對 北韓+蘇 ③韓+美+日+中共+北韓 對 蘇 또는 ④美+日+中共 對 蘇, 그리고 南・北韓은 四強體制밖에서 中立이라는 結合圖式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가지 形態를 想定할수 있다.

(圖表 參照)

南北韓・周邊四大國 및 유엔과의 關係構造

I. 從來의 狀況: 四強構造안의 對稱的 三角體制 (1970 ~ 1977)





이같이 韓半島를 둘러싼 六者間の 勢力關係는 많은 不確實要因이 새로 介入된 가운데 매우 微妙한 錯雜한 流動狀態를 보이고 있어 어떠한 關係類型으로 定着될런지 予測을 不許하고 있으나 앞으로 2・3年間に 걸친 關係諸國間の 外交活動이 東北亞의 勢力版圖를 決定지어 줄 것으로 展望된다. 우리로서는 強大國들의 自制로 動的 勢力均衡下에 「새로운 데탕뜨期」를 마지하게 되기를 希願하나 萬若에 國際情勢가 全面的으로 惡化되어 「第二의 冷戰期」로 逆行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東北亞에 平和體制를 構築하려는 우리나라와 盟邦들의 努力은 그 背景要件을 喪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으로서는 그 同盟關係에 따라 冷熱戰의 渦中에 말려들어가거나 또는 東北亞國際體制的 圈外에서 中立을 宣稱하거나 하는 重大한 選擇의 岐路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끝까지 平和統一의 前提條件으로서 韓半島平和의 制度的 保障을 願하는 限 적어도 亞細亞・太平洋地域에서 四強間에 安定된 勢力均衡이 維持되고 韓半島에 관한 그들의 利害가 調整될수 있을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意味에서 우리나라는 中蘇紛爭의 渦中에 끼어들지 말고 中蘇두나라에 다같이 高루 接近하여 關係를 改善하거나 修交하고 然後에 周邊四強에 대해 「均衡外交」를 展開함으로써 韓半島平和・統一問題의 解決에 有利한 國際環境을 造成하기에 注力해 나가야 한다.

다시 強調하거나와 이와 같이 南北韓間에는 敵對的 共存關係가 持續되고 韓半島를 둘러싼 六者間에는 轉換期的 流動狀態가 持續되는 現段階에 있어서는 情勢推移를 冷徹히 分析·把握하는 가운데 智慧롭고 前進的인 對應策을 講究해 나가야 한다. 具體的으로는 매우 彈力的인 大戰略(Grand Strategy)과 高次元政治(High Politics)를 펴나가는 가운데 즉 政治·外交·軍事面에 걸쳐 綜合的 對應策을 展開해 나가는 가운데 內廓的으로는 大韓民國의 綜合的国力이 北韓을 圧倒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그 武力革命戰略을 放棄하고 南北對話를 통한 平和統一 努力에 呼應해 오게 하고 外廓的으로는 韓半島平和保障과 統一條件 形成을 위한 當事者會談의 開催를 可能케 할 國際的 環境與件을 造成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恒常 「이니셔티브」를 取하며 平和와 統一을 先後 併進的으로 追求한다는 前提下에 우리의 平和戰略을 再定立할것이 緊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段階에서 다른 段階로 넘어가는 過程에 있어서의 國際的 狀況과 北韓의 對應을 보다 精密히 予測할 것이 必要한데 未來를 正確히 予斷하기란 大端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本人은 우리나라 많은 學者들이 그間 研究發展시킨 여러가지 構想을 只今까지의 歷史的 體験을 통해 얻은 教訓과 洞察力을 土臺로 再整理·再編成하여 저나름 대로 試行해 볼 價值가 있다고 생각하는 現段階以後의 우리나라의 平和戰略(韓半島平和의 制度的 保障에 관한 構想)의 發展的 計劃(試案)을 마지막으로 添附해 두고자 한다. (36)

이 計劃試案은 第一段階 對決的 共存, 第二段階 中道的 共存, 第

三段階 協調的共存 및 第四段階 平和統一 및 그 以後의 四個段階  
를 設定하고 있는데 그 要項은 다음 一覽表와 같다.

I. 对決的 共存 段階	
戰略目標	1. 戰爭抑制 2. 南北對話再開 및 當事者會談開催에 有利한 環境與件의 造成
對應策	1. 南北韓間 国力競爭에 있어 圧倒的 優位를 차지한다. 2. 自主國防力을 強化하며 韓美 安保協力態勢를 鞏固히 한다. 3. 유엔軍司令部가 存続하며 韓美聯合軍司令部가 正常機能을 發揮한다. 4. 自由友邦과 友好關係를 持續하고 非同盟諸國에 對한 外交를 積極化하고 非敵性共產國家와도 關係를 改善한다. 5. 共產側이 先制上程하지 않은 限 韓半島問題를 유엔總會에 上程하지 않는다. 6. 韓半島周邊 四大國에 對하여 均衡잡힌 平和外交를 積極展開하여 이들로 하여금 韓半島에서의 平和維持에 協調케 한다. 但 韓國과 中共·蘇聯間 그리고 北韓과 美·日間의 關係改善은

	<p>同時的으로 進行되게 한다.</p> <p>7. 南北對話再開 促進을 위해 北韓에게 보다 具體的이고 前進的인 議案을 事前提示한다. 또한 北韓의 對美平和協定交渉을 牽制하고 中共을 四者會談으로 誘導하는 機略의 하나로서 韓國과 中共間의 平和協定交渉도 提議해 볼 만 할 것이다.</p>
<p>II. 中道的 共存 段階</p>	
<p>戰略目標</p>	<p>1. 平和의 定着 (南北韓不可侵 協定の 締結 및 休戰協定代替 措置의 講究)</p> <p>2. 南北對話의 實質的 進行</p>
<p>對應策</p>	<p>1. 南北調節委員會 會談을 復活시켜 各 分科委員會를 強化하고 韓國側에서는 政治·軍事面에 이르기 까지 積極的 議案을 提示한다.</p> <p>2. 南北調節委員會 會議를 통해서 南北韓不可侵協定을 締結한다. 이 協定은 平和條約과 不戰條約의 兩性格을 띠우되 南北韓問題의 平和的 解決과 軍縮의 原則까지 添附하고 統一時까지의 暫定協定임을 밝힌다.</p> <p>3. 不可侵協定 締結後 南北韓 및 美·中共間에</p>

	<p>四者會談을 열어 韓國休戰協定 代替措置에 관한 四者協定 또는 議定書를 採択한다.</p> <p>4. 南北對話의 構造와 機能을 擴大·強化한다.</p> <p>5. 南北韓一般關係協定을 締結하고 유엔에 同時加入한다. (但 統一時에 單一化할 것을 前提로)</p>
<p>Ⅲ. 協調的 共存 段階</p>	
<p>戰略目標</p>	<p>1. 韓半島平和 및 統一에 관한 國際的 保障의 確保</p> <p>2. 南北韓間 交流 및 協調의 本格化</p>
<p>對應策</p>	<p>1. 南北韓·美·日·中共·蘇의 六者間에 國際會議를 開催하여 韓半島에서의 平和維持 (韓半島의 中立化 또는 緩衝地帶化), 南北韓平和統一原則등에 關係 合意한 國際協定을 締結한다.</p> <p>2. 南北韓이 周邊強大國과 맺고 있는 軍事同盟을 廢棄한다.</p> <p>3. 南北韓은 서로 相對方 首都에 代表部를 設置하고 周邊四強國이 南北韓을 交叉承認한다.</p> <p>4. 南北韓間에 軍縮을 實施한다.</p> <p>5. 共榮邦制를 實施하여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調를 擴大하고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한다.</p>

IV. 統一完成 및 統一後 段階	
戰略目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政治的 統一의 完成</li> <li>2. 統一韓國의 國際的 座標 確定</li> </ol>
對應策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自由選舉를 통해 統一韓國制憲議會를 構成하고 統一韓國憲法을 制定한後 統一韓國政府를 樹立한다.</li> <li>2. 유엔加入을 單一化한다.</li> <li>3. 善隣平和政策을 宣明한다.</li> <li>4. 東北亞 또는 亞細亞·太平洋地域 共同體에 加入한다.</li> </ol>

〈脚註〉

(1) 李承憲 「韓半島 平和統一問題와 國際的與件」 建國大學校附設 統一問題研究所刊 '統一問題研究' 第1輯, 1976, 35-39面.

金瓊元 「國際秩序의 構造的 轉換」 '新東亞', 1972年9月号,

「特輯: 轉變하는 世界와 韓國」, 咸秉春 「國際情勢と 東北アジア」 '外交時報', 1972年8月号, 日本 東京

(2) 閔丙天 「南北韓의 基本關係模型에 관한 考察」 '第1回 韓國政治學會・在北美韓國人政治學者會 合同學術大會 論文集', 1975,

571-578面. 李相禹 「統一모델과 平和共存모델」 '國際政治論叢'

第13・14輯, 1974. 李承憲 「대 땅뜨와 韓國外交의 姿勢- 韓半島平和

・統一問題와 關聯하여」 '韓國政治學會・在北美韓國人政治學者會主 催 第2回合同學術大會 論文集', 1977 서울, 329-336面, 350-354面.

崔昌潤 「四強關係가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平和統一研究所 主 催

國土統一院後援 「새로운 國際秩序속의 韓半島統一과 平和」에 관한 國際學術會議 會議錄, 1975, 서울.

(3) 朴正熙大統領 演說文選集 「平和統一의 大道」 大統領秘書室,

1976. 國土統一院 「韓國의 統一政策」(국통75-6-91), 1975, 李

承憲 「南北關係와 韓半島平和體制 構想」 建國大學校學術研究院刊

'學術誌' 第19輯, 1975, 78-93面. 金學俊 「國內外與件이 北韓의

對南 및 統一政策에 미치는 影響」 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76-12

-120), 1976. 李基遠 「韓國統一政策目標의 段階的 区分 및 戰

略目標의 系列化에 관한 研究」 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77-10-119)

5), 1977, Kim Se-Jin, ed, Korean Unification,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4) 金瓊元 「유엔과 南北韓關係」, 申相楚 「韓國의 對유엔外交와 北傀의 反應」, 朴奉植 「北傀의 유엔政策推勢와 展望」 ~ '國際問題' 1974年8月号, 16-21面, 22-27面, 28-34面. 李承憲 「韓國의 對유엔政策」 '韓國政策科學論叢' 第2輯, 1972年.

(5) 金世珍 「韓半島戰爭抑制 및 平和統一을 위한 基本戰略構想」 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 (76-12-115), 1976, 33-39面. 趙在權 「平和定着의 民族的 寄與」 南北調節委員會刊 「南北共同聲明發表6周年 學術세미나 主題論文 및 討議錄」 1978. 서울, 62 ~ 88面. 閔丙天 「平和定着과 平和統一」 現代政治研究會刊 「自主性確立과 民族中興」 (1977) 所載論文, 215-228面, 文化公報部 「不可侵協定을 拒否하는 北韓의 속셈」 1974, 21面.

(6) 朴奉植 「平和定着方式에 관한 南北韓의 態度評價」, 閔丙天 「南北韓不可侵協定の 論理에 관한 考察」 國土統一院刊 '統一政策', 1977年 第3卷第1号, 48-59面, 60-69面. 盧明潛 「不可侵協定과 平和協定問題를 圍繞한 北傀의 對美直接協商 對處方案」 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 (77-1-1127), 1977, 3-10面. 金得柱 「韓半島平和定着을 위한 南北韓平和共存關係의 法理論에 관한 研究」 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 1977, 32-34面, 58-56面.

(7) 梁好民 「北韓의 對南戰略과 이에 대한 對備策」 全南大統一問題研究所 및 朝鮮大統一問題研究所 主催 「統一·安保에 관한

세미나」(1978,6.23) 發表論文, 同會議錄. 3-20 面. 兪光震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安保研究』 第3号, 東国大安保研究所, 1973, 102-104 面. 「北韓共產主義 이데올로기와 政治」 『自由아카데미 研究論叢』 第6輯, 1978. Il Sung Kim, Selected Writings of Kim Il Sung: Revolution and Socialist Construc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8) 盧明潛 前掲論文. 曁丙天 「UN 軍撤収 또는 解體案 通過時 對備策」 国土統一院政策企劃室(76-12-102), 1976.

(9) 崔平吉 「北韓의 對外政策-美·北韓關係를 中心으로」 東北亞研究所主催 「最近 蘇·中共의 動向과 東北亞의 安保」에 관한 第1回 韓日學術심포지움(77年7月·서울)에서의 發表論文. 盧明潛 前掲論文, 17-23 面.

(10) 李承憲 前掲論文 「대 땅트와 韓國外交의 姿容」 339-340 面.

(11) Henry A Kissinger, "Global Goal: Programs of Common Action", A Speech before the UN General Assembly, September 30, 1976. Nathan White, "Search for peace: The Four Powers an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VI, NO. 1, (Winter 1974/75). 朴俊圭 「美國의 東北亞政策과 韓半島」 서울大國際問題研究所主催 심포지움 發表論文, 1976. 11. 河萬瓊 「韓半島의 平和와 強大國의 交叉承認」 外交安保研究院刊

‘外交・安保論叢’ 第1卷, 1978, 211-230面。

(12) 金達中 「南北韓關係發展을 위한 安保體制 再調整問題」  
‘第1回 韓國政治學會’ 在北美韓國人政治學者會 合同學術大會 論文  
集’ (1975), 555 ~ 559面。丁得圭 「休戰當事者會談의 可能性과  
展開樣相 予測」 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 1977。李承憲 前揭論文 「韓  
半島 平和統一問題와 國際的 與件」 41面, 47-48面

(13) 黃顯鳳 「北傀의 對유엔政策 留保態度」 ‘國際問題’ 19-  
77年11月号, 23-33面。

(14) 李基錄 「韓半島平和體制에 의 接近과 國家安保」 ‘國際問題’  
1974年3月号, 29-35面 「南北韓關係의 段階와 論理」 高大重細亞  
問題研究所 學術會議發表論文, 1974年7月。朴東雲 「強대國間의  
和解構造와 韓半島의 平和體制」 ‘國際問題’ 1974年3月号, 22-  
28面。

(15) 朴東熙 「6.23宣言의 戰略論理와 東西獨關係와의 比較評價」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1973。金哲洙 「分斷國家의 對UN아프로치  
: 東西獨型, 南北韓型」 ‘政經研究’ 1973年9月号, 128-138面。朴  
奉植 「西方側 統合理論과 共產側合作戰略의 比較」 國土統一院政策  
企劃室(76-12-67), 1976。閔內天 「北韓의 統一戰略을 勘案한  
收斂理論의 韓半島適用方案」 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76-12-111),  
1976。李相禹 「機能主義統合理論과 南北關係改善方案研究」 國土統  
一院政策企劃室(76-12-121), 1976。

Karl W.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Politics",  
Englewood Cliffs, N.J., USA, 1968. Kang Byung-Kyu, "The Vision  
of the Asian and Pacific Peace System in the 1970's"  
Koreana Quarterly, Vol. XIV, No. 4 (Winter 1972-3).

(16) 李承憲 「東北亜力学關係와 로카르노式接近-韓半島平和와  
安保의 規範化·制度化를 위한 한 方案」 '政經研究' 1976年3月  
号. 原本은 Rhee Sung-Hon, "The Peace System in Northeast  
Asia and the Role of Korea", contained in a book 'Strategy  
for Peace'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World Peace held by the Professors World  
Peace Academy of Japan), Tokyo, 1975, pp. 103-120.

(17) 金得柱 「韓半島平和定着을 위한 南北韓平和共存關係의 法  
理論에 관한 研究」 国土統一院政策企劃室, 1977. 金世珍, 前掲論文.  
吳琪坪 「開港百年, 韓半島中立化案의 歷史的 論議의 分析」 韓國政  
治學會 1976年度 年例심포지움 發表論文.

(18) 金世珍 前掲論文 「韓半島 戰爭抑制 및 平和統一을 위한  
基本戰略構想」. 閔丙天 「UN軍撤収 또는 解體案 通過時 對備策」  
国土統一院政策企劃室 (76-12-102), 1976. 盧明潛 「UNC 解體時에  
考慮해야 할 諸問題에 관한 研究」 国土統一院政策企劃室 (77-12-  
1362), 1977.

(19) 閔丙天 上掲論文 「UN軍撤収 또는 解體案 通過時 對備策」.

李基遠 「世界軍事情勢動向에서 본 南北軍事關係의 長短期展望」 國  
土統一院調查研究室 (76-12-101), 1976.

(20) 閔丙天 上揭論文.

(21) 李承憲 「主軸諸國의 執權層變動과 世界史潮流」 '政經研究'  
1977年1-2月号, 92-102面.

(22) 朴泰植 「相互不可侵提案과 美軍撤収不反對論」 '政經研究'  
1977年1-2月号, 34~37面.

(23) 朴俊圭 「美國의 東北亞政策과 韓半島」 서울大 國際問題  
研究所主催 심포지움 發表論文, 1976. 朴在圭 「카터의 對韓政策과  
韓國安保」 '北韓', 1977年1月号. 姜英勳 「駐韓美軍撤収의 韓國  
의 再評價」 '北韓', 1977年7月号. 李承憲 「카터新行政府와  
韓美關係」 '國民論壇' (韓國維新學術院刊) 第15号 (1977年4月).  
1977年1月24~25日 亞細亞政策研究所主催로 서울에서 열린 「東  
北아시아에 있어서의 韓·日·美關係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發表된  
諸論文. Cyrus R. Vance, "A New Sense of Community in Asia  
and the Pacific", An Address before the Asia Society, New  
York City, June 29, 1977.

(24) 「第10次 韓美安保協議會議 共同聲明」 1977年7月27日字 東  
亞日報 및 7月28日字 韓國日報. 「第11次 韓美安保協議會議 共同  
聲明」 1978年7月28日字 東亞日報 및 7月29日字 朝鮮日報. 「지  
미·카터」 「對外援助法에 의한 韓國報告書」 '國際問題', 1978年  
2月号, 60-67面.

(25) 金憲・金相俊・盧在鳳・柳世熙・南時旭 「심포지움: 韓半島平和定着의 條件」 '新東亞' 1978年6月号. 閏丙天 「三者會談은 實現될 것인가」 '北韓', 1978年6月号, 46-53面.

(26) 李相禹 「平和定着의 可能한 模型 探索」 南北韓調節委員會會刊 「南北韓共同聲明發表 6周年 學術세미나 主題論文 및 討議錄」 1978, 51-61面

(27) 三好修 「80年代의 아시아·太平洋情勢의 展望」 第8回世界平和國際學術會議(1978年7月, 東京)에서의 發表論文. 「特集: 國際情勢를 總點檢する」 '世界週報' 1978年9月5日号, 東京. Helmut Sonnenfeldt, "Russia, America and Détente", *Foreign Affairs*, Vol. 56, No. 2 (January, 1978).

(28) 李承憲 「中·소紛爭과 東아시아」 '北韓', 1978年10月号, 92-101面. 「벤자민·슈바르츠」 「美·中共關係正常化 서두를 必要는 없다.」 '週間朝鮮' 1978年7月30日号. "Peking Sound-ing out Pan-Asian Security Pact", *Korea Herald*, June 18, 1978.

(29) 李庭植 「日·中共友好條約과 韓半島」 '北韓' 1978年10月号, 124-128面. 崔榮 「美·日·中共 三角聯合은 韓半島에 有利한가」 '政經研究' 1978年10月号, 66-77面 「特集: 國際情勢를 總點檢する」 '世界週報' 1978年9月5日号, 東京.

(30) 民主共和黨政策研究室編 「1986: 先進韓國」 1978, 第16

章 南北韓經濟의 比較와 展望. 英國戰略問題研究所刊. 「世界各國  
戰力現況」 1978年版. 東亞日報 1978年9月27日号.

(31) 金學俊 「國內外与件이 北韓의 對南 및 統一政策에 미치는  
影響」 国土統一院政策企劃室 (76-12-120), 1976, 5-6面. 李基遠  
前揭論文 「韓國統一政策目標의 段階的 区分 및 戰略目標의 系列化  
에 관한 研究」 51-62面.

(32) 李昊宰 「韓半島平和體制論議—그 是非의 帰趨」 '國際問題'  
1976年4月号, 56-59面. 李源俊 「分断國 統一條件造成에 있어서의  
經濟力의 重要性」 '政經研究' 1976年8月号, 38-45面.

(33) 李承憲 前揭論文 「대남프와 韓國外交의 姿勢—韓半島平和  
統一問題와 關聯하여」. 李永錫 「駐韓美軍 減縮撤収의 時期 및  
形態予測과 그것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国土統一院政策企劃  
室 (77-10-1193), 1977, 27-45面.

(34) 金正煥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해 可能的 國際保障體制와  
問題點」 国土統一院政策企劃室 (77-10-1197), 1977, 3-8面, 71-74面

(35) 金裕南 「超強대남프構造와 南北抑制體制」 '第2回 韓國政  
治學會·在北美韓國人政治學者會 合同學術大會 論文集', 1977, 서울  
350-360面.

(36) 李基遠 前揭論文 「韓國統一政策目標의 段階的 区分 및 戰  
略目標의 系列化에 관한 研究」. 金正煥 前揭論文 「韓半島 平和定  
着을 위해 可能的 國際保障體制와 問題點」. 金世珍 前揭論文 「韓

半島戰爭抑制 및 平和統一을 위한 基本戰略構想」. 閔內天 前掲論文  
「UN軍撤収 또는 解體案通過時 對備策」. 李相禹 前掲論文 「平  
和定着의 可能的 模型探索」. 金得柱 「韓半島平和定着을 위한 南北  
韓平和共存關係의 法理論에 관한 研究」. 柳錫烈 「平和統一三大原  
則의 實踐方案」. 外務部外交安保研究院發刊 '外交·安保論叢' 第  
1輯, 1978, 204-201面, 李承憲 「南北韓 平和戰略 比較-그 構想  
內容과 展開狀況을 中心한 考察」 韓國國際政治學會 1978年度 年  
例심포지움 發表論文, '國際政治論叢' 第18輯, 1978, 163-187面.



#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 -- An Interim Review of Its Harsh Process and Problems Involved --

By Sung-Hon RHEE

### Resume

According to the vicissitudes of international power configuration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power structure of Northeast Asi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oo, has changed for several times. When the mutually-checking balance of power system among the four big powers -- USA, USSR, PRC and Japan -- emerged in the Asian-Pacific region as an upper-stratum international system with a dominant role according to the detente trend in the 1970s, this in turn was projected onto the Korean Peninsula and, with the South-North dialogue initiated by the ROK as a turning poin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ere eventually incorporated into the four-big-power structure in Northeast Asia and a perplex power relation in the name of cross-cutting bimultipolarity began to develop. Hereupon, it was raised as a common task to coordinate the differing posi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surrounding four big powers

and institutionalize the interests of all parties concerned into a peace system or an international order, but the subsequent developments proved how difficult it was.

In this article, I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he variables affecting the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he basic principles and frames of reference concerning the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how the efforts of the ROK to secur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isguised peace offensive of the North Korea have changed their detailed aspects and mutually interacted in the broader context of respective unification policy, and while doing do, I also made an interim examination of the problems involved and the future prospects.

Our country's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as integrated in total in the "Three Main Principle of Peaceful Unification" declared in August 15, 1974, is based on pacificism,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unctionalism. Because this policy bears soberness and consistency and is reasonable, logical and realistic, it has won international sympathy and support. Upon the logic of "peace first and unification later," it presents

as concrete measures to secur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conclusion of South-North Korea Non-aggression Agreement, the simultaneous entry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to the UN and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surrounding four big power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who had alternately adopted violent method and peace offensive method according to whether the relative national strength is superior, equal or inferior to the ROK and whether the surrounding international situation is favorable, non-transparent or unfavorable, assumed a strategy of absorption coexistence in the early 1970s but later retreated to the strategy of preserving their own system. The various proposals and platforms which North Korea has put forth in the meantime, intend in common to prepare ground for communized unification through southward re-invasion or revolution in South Korea while obstructing the formation of a new balance of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by casting away any international factors and thus simplifying the problem of Korean unification as a pure internal problem as well as expediting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from South Korea.

Since the North Korea unilaterally suspended the South North dialogue, unification policy and peace strategy of

South and North Korea came to confront with each other in the international diplomatic scenes. North Korea, on March 25, 1974, proposed to the USA the conclusion of bilateral peace agreement, while on the other hand intensifying its disguised peace offensive within and without the UN. In the 30th UN General Assembly in 1975, the two resolutions on Korean problem containing essentially different contents were both passed, and this fact backed up the logic that UN reached its limit of capability as far as Korean problem was concerned and consequently there were no other choice but to bring it to the direct tal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the conference of concerned parties. In fact, Korean question has not been discussed in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e last three years, 1976-78.

Earlier, US Secretary of State Henry Kissinger, in his policy speech at the UN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30, 1975, proposed to hold a conference of all parties concerned with the Korean truce, e.g., South and North Korea, USA and PRC, and then an enlarge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problem among six powers adding USSR and Japan. Upon consultation with the ROK government, he later made amended proposal that this

scheme of conferences could be preceded by a South-North Korea preliminary talk. These proposals reflect the idea that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doubly guaranteed by both South-North Korea agreement and international agreement among surrounding four big powers. However, North Korea as well as USSR and PRC showed negative response to this proposal.

By this stage, a variety of schemes and measures have been proposed in our country. As their frames of reference, the method of Locarno System, the method of coexistenc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method of Northeast Asian compound security community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Un Security Council, etc., had been suggested; and beside these, a commonwealth system, neutralization of Korean Peninsula (or turning Korean Peninsula into a buffer zone), disposition of a Un Peace Observation Commission or Forces, establishment of the USA-ROK joint command, a political approach to disarma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clusion of general relation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tc., had been proposed.

As the power holders or power system changed and accordingly their respective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reoriented in the surrounding four big powers over the

period 1976-77,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obliged to readjust their relations with surrounding four big powers. Hereupon, our country further strengthened the ROK-USA posture of strategic cooperation by arranging military and diplomatic compensatory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plan for US troop withdrawal from Korea as being carried on by Carter Administration. Recently, the emergence of USA-Japan-PRC entente following the conclusion of Sino-Japanese Peace and Friendship Treaty on August 12, 1978 has made the power rel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fluid and perplexed.

In the meantime, particularly after the Indochinese debacle, both the ROK and the USA could not help putting emphasis on security strategy which placed priority on deterring war. It appears that because of the unmaturnedness of international conditions and North Korea's persistent pursuit of armed revolutionary strategy, the peace strategy over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the idea of institutionally guarantee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lingering at its starting point without making any substantial progress. However, as far as we want to institutionalize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to create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favorable for it

by more positively deploying a balanced peace diplomacy toward the surrounding four big powers and thus lead North Korea to the table of South-North dialogue or conference of concerned parties.

Finally, my personal idea on the strategic goals to be set forth and concrete measures to be taken in the four stages -- the first stage of confrontational coexistence, the second stage of balanced coexistence, the third stage of cooperative coexistence and the fourth stage of political unification and after -- is expounded.

